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

2023

1004년 **신안**

제 출 문
신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수행한 ‘2023년 신안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장 이 덕 희

요약

1. 배경과 목적

■ 배경과 필요성

-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 차원의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주류화를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으로 유지되는 상태임
 - 지금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보편적 욕망을 담은 인류의 공통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별 최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임
- 신안군은 갯벌, 천일염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 개발이익 공유화, 버스 공영제와 같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세우며, 지속가능발전의 사례를 통해 국내외 선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정책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의 증진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




■ 목적

- 신안군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할 진단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체계를 활용
 -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안군의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해 신안군의 지속가능성의 현 주소 파악 및 향후 개선 과제 도출하고자 함

2. 신안군의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진단






■ 한 눈에 보이는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평가

- 지표의 추세 분석을 통한 지표가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
 -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값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검토
 -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에 따라 지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선되는 추세인지, 악화하는 추세인지를 판단
- 지표에 대해 신호등 형상을 활용해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함
 - 평가 지표의 종합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제시
 - 다만, 일부 평가 지표의 경우, 전남의 타 시군과 비교 또는 전국적인 평균에 못 미치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추세는 상향이어도 다소 낮게 판정함

구분	양호	보통	미흡
표현			
특징	추세 향상	정체상태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

[표 1]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평가 기준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평가와 진단
 - 환경, 사회, 경제, 법제도/협치로 구분해 각 영역과 연계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평가를 시도
 - 긍정과 부정의 영역으로 구분해 개선이 필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요약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술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평가 결과	분석 결과의 요약
환경 영역	6 (물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보급률은 90% 안팎을 보이고,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 확보와 물 재이용 정책이 더욱 중요해짐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2021년 현재 94.8%이고, 전남은 82.8%에 이르지않, 신안군은 섬 지역의 특성 때문에 41%에 불과함. 하수 정책은 해양생태계 보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섬의 하수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까지 4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60만 톤 수준으로 급증했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까지 1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1.7kg까지 급격하게 증가 다만,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크게 상승함 지속적인 폐기물 감소 정책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13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안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라남도 타 지역과 비교해 높지 않으나, 군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2020년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모두 수송 부문에서 발생했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인지 예산도 적극 고려해 결정해 탄소중립 섬을 향한 방향도 고려되어야 함
	14 (해양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생태자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15 (육상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 면적은 전남의 평균 56%보다 낮은 50%를 보이는데, 섬 지역의 한계로 보임 1인당 녹지지역 면적도 전남 평균에 못미치지만, 특색있는 녹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사회 영역	1 (빈곤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인구 고령화가 미친 영향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증가추세이고, 독거노인은 크게 증가해 복지분야의 정책 대응이 요구됨
	3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이나 최근 약간 정체에 접어들었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전남 22.5개에 비해 신안군은 10개로 개선이 요구됨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인구 고령화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남성 자살자 수가 급격히 늘어 개선이 요구됨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평가 결과	분석 결과의 요약
	4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수가 2011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적령 아동 취약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공공 도서관 보유 자료는 6만 2천여 권이나, 도서관의 연간 대출권 수는 4천 여권에 불과해 개선이 요구됨
	5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32%로 전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도 전남 평균에 못 미쳐 개선이 요구됨 여성폭력 상담소가 없어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 제도 역시 일부 정비가 요구됨
	10 (불평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300만 원 미만은 전남 평균보다 낮아 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인구 비율 대비 다문화가구 수도 높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에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개선이 요구됨
경제 영역	2 (기아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면적은 지속적 감소했으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및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은 증가함 친환경 먹거리(천일염, 농축산물, 수산물) 생산 거점 역할이 가능함
	7 (친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다소 낮고,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임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증가로 전력자립률 100% 달성함
	8 (양질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은 높고 증가 추세이며, 실업률은 낮고 감소 추세임 다만, 경제활동인구, 상용직 인구, 취업자 수, 청년 고용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9 (산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수는 증가 추세이고, 관광지점 다각화로 관광객 수 증가로 나타남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보급률은 적절한 상태이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0%를 차지해 개선 필요함 빈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남
법제도/협치 영역	16 (인권, 정의, 안전,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예산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재정자립도는 6.6%에 그침 재난사고 및 피해 현황은 기후재난에 따라 나타나 재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함 자동차 사고는 감소 추세이고 낮은 수준임
	17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함 정보공개율은 감소 추세이며 타 도시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매년 등급 개선을 통한 투명한 행정이 요구됨

[표 2]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분석의 주요내용

■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평가에 대한 이야기

“서울에서 교통 상 제일 먼 지역, 도시화 면적 0.33%로 전국 최하위…”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의 기회로 삼다

전라남도 최남단의 신안군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에서 교통 상 거리감이 제일 먼 지역이다. 많은 섬으로 구성된 1004섬, 신안군은 육지면적 655.6km² 중 0.33%만 도시화되었다. 이는 전국 시군구 도시화 비율 중 제일 낮다.

제일 멀고, 제일 발전되지 않은 ‘신안군’은 가장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신안군의 바다의 면적은 12,654km²로 서울특별시의 22배에 달하고, 그 바다 중 8%의 갯벌 습지는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21.7.26. 등재)’으로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천연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장도 랍사르 습지, 증도 랍사르습지, 다도해상국립공원, 신안갯벌도립공원 등 천연자연을 지닌 신안군은 그 빼어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연정화법을 활용한 마을하수처리장 확대, 갯벌·하천 보호를 위한 유용미생물(EM) 보급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람이 돈이 되고, 햇빛이 돈이 됩니다.” 전국 최초 햇빛 연금 도입

기후위기의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신안군은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1,407.5(MW), 풍력 발전 2,699(MW) 용량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정책을 실현하였다. 안좌면, 지도읍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개소하고, 2022년에는 11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햇빛 연금’으로 공유하였다.

“섬 네트워크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2022년 신안군은 “제1회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1004섬이라 불리는 신안군은 1,025개 섬(유인도 73, 무인도 952)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섬 문화가 존재한다. 개별 섬의 교통편은 대개 육지로 이어지고 섬과 섬의 소통과 교류는 미비하다. <자산어보>의 ‘정약전 바다학교’ 도입, 그림책으로 섬을 그려낸 ‘그림책아일랜드’, ‘행복전남 문화지소’ 등 다양한 섬지역 문화를 엮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처하는 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뿐 아니라, 블루 카본(blue carbon)을 저장할 수 있는 바다 정원화 사업, 그린 카본(green carbon)을 위한 마을숲 확대 등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자동차 지원, 아열대 작물 등 신소득작물 발굴 및 육성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 신안군 지표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안으로 구성

▪ ‘햇빛, 바람,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신안군‘

1004섬의 자연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신안군의 자연적 자원을 최대한 지속가능발전 활용하는 비전을 구상, 햇빛과 바람(재생과 경제), 갯벌(보존과 경제), 공존(사회정의, 불평등해소, 포용사회)의 의미를 비전으로 반영

▪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SDGs의 섬 모델 지역으로 제시

(생태친화적 리더십, Eco Leadership) 민선 6기부터 강조되어 온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확산하고 전략적으로 확산

(사회 서비스 혁신, Social service innovation)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환경이 불편한 섬 지역의 특수성을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위기와 연계하여 혁신

(거버넌스 3.0, Governance, leading by Local)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기관 네트워크의 핵심축



〈그림 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

○ 비전 실현을 위한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단계별, 주체별, 운영체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입체적으로 구성

- (단계별 분류) 인식 전환 → 정책 고도화 → 정책 주류화,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전략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단 계	전략 요인	군정 반영	비고
인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리더십) • 기후위기, 기본법 시행 등 시대적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성 입히기 	
정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의 정책 다양화 • 타 지자체 선도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 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 어필 가능한 정책 다수 • 국제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프로젝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섬지역 SDGs 정책의 글로벌 선도모델화 	

[표 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단계적 분류

- (절차적 분류) 지표 수립 → 이행과 실천 → 평가와 점검 → 환류, 지표 수립 및 재작성과정에서 전략 요인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강조 필요

단 계	전략 요인	군정 반영	비고
지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인식 • 부서 핵심 목표에 대한 지속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 시민 교육의 지속적, 광범위한 실시 후 • 부서에 맞는 지표 수립(지표 고도화) 	교육인력 양성필요
이행,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체계 확대 • 속의 공론의 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지속위와 지속협의 안정적 운영, 도서지역 적합 공론장 구축 	
평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평가, 공약평가 연계 • 시민 참여형 평가 • 보고 및 대외 홍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LR 보고서 작성 • 부서별 평가 시스템 구축 • 평가 매뉴얼 수립, 운용 	

[표 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절차적 분류

(실행 과제 1) 지속가능성 인식 및 지속가능성 입히기 전략

- 현재 신안군정의 지향점을 지속가능성 확대, 지속가능발전의 대입을 통해 새로운 군정 방향과 대외 홍보 루트를 개척할 수 있음
 - 현재 신안군의 대표적 브랜드인 1004섬 정책의 경우 문화 예술의 강조,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관성은 유지하되 전체를 통일하지 않는 다양성, 코로나19 신안군 트렌드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인지도 확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3요소는 1992년 브라질 리우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발전 정책들의 공통점임
 - 이외에도 신안군의 대표정책을 지속가능성으로 통합(브랜드화)하는 과정은 정책의 인문·사회학적인 배경과 철학을 보강하고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현재 1004섬은 지명적 특징 외에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슈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1004섬, 햇빛과 바람과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1004섬’이라는 지속가능성 관점의 해석이 필요함
 - 대다수 지속가능발전 전문가들은 신안군의 정책 내용이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신안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알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 신안군의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적 지향과 철학을 갖도록 하는 전략은 지자체장의 정확한 군정철학과 공무원, 군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군정 적용 사례(기자회견 세트장)	결재 문서의 적용 사례																
	<div style="background-color: #00838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신안군 SDGs 적용 개괄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신안군 SDGs</td> <td colspan="3">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td> </tr> <tr> <td>세부목표</td> <td colspan="3">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td> </tr> <tr> <td>관련 SDGs</td> <td colspan="3">  </td> </tr> <tr> <td>부서</td> <td>00000</td> <td>주요분야</td> <td></td> </tr> </table> <div style="background-color: #00838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사업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회 구현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려한 사회 정책의 구현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3. 3 ~ 연중 · 사업대상: 빈곤층과 취약계층 	신안군 SDGs	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			세부목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관련 SDGs				부서	00000	주요분야	
신안군 SDGs	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																
세부목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관련 SDGs																	
부서	00000	주요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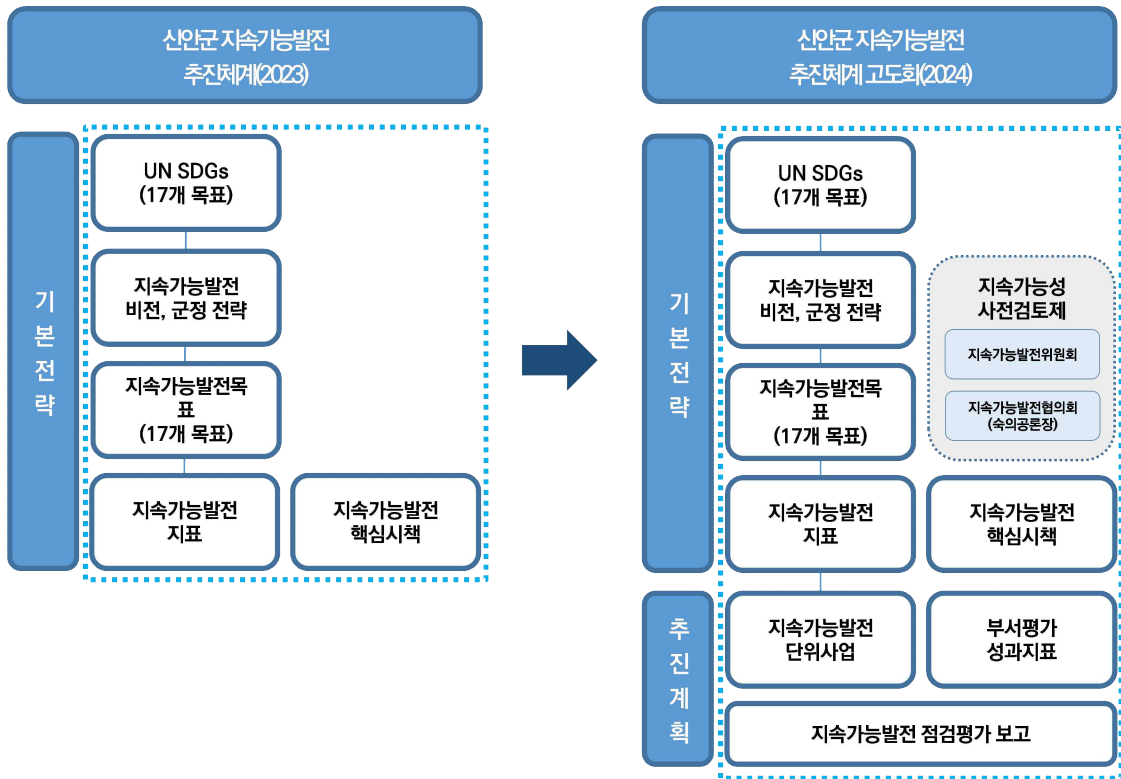
〈그림 2〉 신안군의 모든 시정 콘텐츠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



〈그림 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단계별 추진 과정

(실행과제2)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2023~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 구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공론의 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 노력 필요
 - 2023년 개괄적 정책 구성(동 용역) 이후 2024년에는 목표, 전략, 지표, 추진 체계, 핵심 시책 등을 정비하는 고도화 과정이 바람직함. 이는 군청 직원, 군민들의 부담과 반감을 최소화하고 지표 등의 반영 검토 등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임
 - 정책 추진체계는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체적인 기본계획(비전, 전략 포함)과 이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할 수 있음. 기본계획은 변동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행계획은 실행가능성과 구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신안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UN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1회 보고서 작성 내용을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운용이 필요함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실행과제 1, 실행과제 2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존 고전적인 행정체계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종합적인 분석과 연계, 신안군 전국 선도 모델화를 위해서는 국 단위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함



〈그림 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고도화 계획(안)

- ‘지속가능발전국’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공약 관리,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생태계보전 사이트 등록 등의 주요 업무가 완료되어가고 있는 세계유산과의 기능과 재생에너지, 생태관광, 사회 서비스 혁신, 민관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5〉 신안군 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제안(안)

정책 유형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①, ③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통합·연계 운영
		• 지붕 없는 에코 박물관,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기관, 기업 연수 기능 부각
①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전 국민 재공유<퍼플펀드> (고향기부제 결합)	•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교육복지, 청년에 일부 재공유
		• 신안군 탈석탄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고향기부 활용
②	신안군 2030 탄소세 도입	• 향후 늘어날 관광객과 시대적 과제 대응을 위해 기 폐지된 입도세를 주민 이익공유제와 결합하여 탄소세로 부활
		• 현재 호응이 부족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보존과 연계된 기금으로 활용
③	2032 Rio+40 신안군 유치	• 신안군 수범 사례를 중심으로 1992년 이후 10년마다 계속 개최되고 있는 Rio+40 유치(아시아 지역 최초)
②	2030 신안형 주민복지기준선	• 신안군 통합적 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복지기준선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제정·운영
②	신안군 생태공정 청년생태계 조성	• 섬 환경보존, 생태조사를 최대한 일차리로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
③	신안군 연례 인권 보고서 발간	• 국제 사회 기준, 인권 영향 평가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 통해 작성 배포

[표 5]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안)

(실행 과제 3) 정책 성과 제고가 가능한 초기 선도정책 발굴 및 추진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음
 - ① 기존 핵심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연관 높은 요소 등을 부가하여 정책을 업그레이드
 - ② 군정 도입 초기에 운용 부담이 적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시(군민들의 이해 확산)
 - ③ 신안군의 정책 여건과 중앙 정부,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외부 재정투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
- 다만, 초기 선도정책은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장기재정 투자보다는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조정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안군 핵심전략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시범 성격의 전략 제시)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24년 고도화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동 용역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지표를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토론을 통해 설정함
 - (시민 속의 공론장) 신안군 SDGs의 최종 확정은 광범위한 분야의 시민 의견과 속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지표 설정이 가능함
 - (SDGs 정책 변화) 현재 기본법 시행 이후 금년 중 국가지속위(대통령 직속)의 구성과 함께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구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옥상옥의 문제 대두) 현 신안군의 부서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없을 경우,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자칫 민선 8기 공약, 2023 핵심업무 추진 체계와 중복되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고도화 단계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 유익함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그림 6〉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영에 관한 기본전략 구상(안)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신안군 주민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공영제 이용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중심 기능 활성화
	신안군 성평등, 인권 지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보고서 인권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연계
	신안군 물순환 체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다양성 지역 개발, 건축 교통, 도로 관리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퍼플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플펀드<매년> 5억<고향기부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기부제 연계 전 국민 탈석탄 펀드
	신안군 생태·문화·공정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머리물떼새를 관람하는 관광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스템 연계 강사, 투어, 관리 통합 관리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안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 안전 매뉴얼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 해수면 상승 등 재난 대응 및 안전 대책 기후, 수온변화로 인한 농수산 여건 변화 대응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생산량 탄소흡수량 정원조성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 보존
	전 국민 신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탄소세 도입 매년 27억 <90만 명×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생태보존 기금성격 (입도세의 시대적 변화 대입)
	신안군 SDGs 속의공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과 기능 확대 속의공론장 운영

[표 6]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목차

요약

제1장 보고서의 개요	1
1. 배경과 목적	3
2. 범위와 방법	4
3. 보고서의 세부 내용	5
4. 보고서 작성의 추진체계	6
제2장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7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국제적 흐름	9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현황	16
제3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21
1. 국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동향	23
2.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	33
제4장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39
1. 기초 현황 조사의 개요	41
2. 환경 : SDG 6, 12, 13, 14, 15	45
3. 사회 : SDG 1, 2, 3, 4, 5, 10	57
4. 경제 : SDG 7, 8, 9, 11	72
5. 법제도와 협치 : SDG 16, 17	87
6.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분석 결과와 시사점	96
7. 신안군 민선 8기 공약 사업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	101
제5장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105
1. 개요	107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108

제6장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언	127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129
2.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작성과 내용	131
3.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구성과 내용	133
4.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35
5.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138
6.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의 제도화	141
7. 이해관계자 그룹을 통한 숙의공론장	143

〈표 차례〉

제2장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표 2-1] MDGs와 SDGs 비교	16
-----------------------------	----

제3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표 3-1] 영국 정부의 목표별 주관부처	25
[표 3-2]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작성 과정과 특징 비교(작성 연도순)	35

제4장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표 4-1] 신안군 지속가능성 통계 분석 및 평가 방법	41
[표 4-2] 신안군 지속가능성 분야별 SDGs 연계 분석 기준	42
[표 4-3] 기초현황 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지표 목록	44
[표 4-4] 신안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2019년과 2020년)	50
[표 4-5] 신안군 공공도서관 현황(2022년 8월 현재)	64
[표 4-6]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평가 기준	97
[표 4-7]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분석의 주요 내용	100
[표 4-8] 민선 8기 공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성 분석 결과	104

제5장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표 5-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단계적 분류	109
[표 5-2]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절차적 분류	109
[표 5-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안)	113
[표 5-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116
[표 5-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한 국가 통계자료 목록	118

제6장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언

[표 6-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129
[표 6-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차이점	130
[표 6-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이점	137

〈그림 차례〉

제1장 보고서의 개요

〈그림 1-1〉 신안군의 위치와 행정구역	4
------------------------------	---

제2장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그림 2-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배경	12
〈그림 2-2〉 UN SDSN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23년)	13
〈그림 2-3〉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

제3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그림 3-1〉 독일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24
〈그림 3-2〉 미국 뉴욕의 OneNYC 2050과 SDGs의 관계	26
〈그림 3-3〉 영국 브리스톨의 VLR(자발적 지역 보고서, 2019, 2022년)	27
〈그림 3-4〉 일본 이키섬의 전경과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	29
〈그림 3-5〉 바누아투의 환경계획과 환경데이터포털	30
〈그림 3-6〉 사모아의 SDGs 평가 결과	31
〈그림 3-7〉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6
〈그림 3-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구성 체계	38

제4장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그림 4-1〉 상수도 보급률 전라남도 평균과 신안군 비교	45
〈그림 4-2〉 하수도 보급률 전라남도 평균과 신안군 비교	46
〈그림 4-3〉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의 비교	46
〈그림 4-4〉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46
〈그림 4-5〉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의 비교	47
〈그림 4-6〉 전라남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48
〈그림 4-7〉 전라남도 군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49
〈그림 4-8〉 전라남도 시군별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량 1대당 배출량	49
〈그림 4-9〉 신안군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추이(2015~2020)	49
〈그림 4-10〉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51
〈그림 4-11〉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구역 현황	52

〈그림 4-12〉 신안군 임야현황	54
〈그림 4-13〉 신안군 읍면별 임야면적	54
〈그림 4-14〉 전라남도 시군별 전체 면적 대비 임야비율	54
〈그림 4-15〉 해안방재림 조성 면적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55
〈그림 4-16〉 전라남도과 신안군의 1인당 녹지면적의 변화	56
〈그림 4-17〉 전라남도 시군별 1인당 녹지지역 면적(m ²)	56
〈그림 4-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전라남도 현황	57
〈그림 4-19〉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라남도 현황	57
〈그림 4-20〉 고령인구 비율의 전라남도 현황	58
〈그림 4-21〉 고령인구 수와 구성비(%)	58
〈그림 4-22〉 장애인 등록 현황의 전라남도 현황	58
〈그림 4-2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전라남도 현황	59
〈그림 4-24〉 독거노인의 전라남도 현황	59
〈그림 4-25〉 의료기관(병원 수)의 전라남도 현황	60
〈그림 4-26〉 의료기관(인구 천 명당 병상 수)의 전라남도 현황	60
〈그림 4-27〉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의 전라남도 현황	61
〈그림 4-28〉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전라남도 현황	61
〈그림 4-29〉 자살률의 전라남도 현황	62
〈그림 4-30〉 자살률(남성)의 전라남도 현황	62
〈그림 4-31〉 자살률(여성)의 전라남도 현황	62
〈그림 4-32〉 학교 수의 전라남도 현황	63
〈그림 4-33〉 학급당 학생 수의 전라남도 현황	63
〈그림 4-34〉 학급당 학생 수의 전라남도 현황	63
〈그림 4-35〉 적령 아동 취학의 전라남도 현황	64
〈그림 4-36〉 공공도서관 보유 자료의 전라남도 현황	64
〈그림 4-37〉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 수의 전라남도 현황	65
〈그림 4-38〉 문화재의 전라남도 현황	65
〈그림 4-39〉 체육시설의 전라남도 현황	66
〈그림 4-40〉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67
〈그림 4-41〉 전라남도 시군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2021년 기준)	68
〈그림 4-42〉 신안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추이	68
〈그림 4-43〉 여성폭력 상담소의 전라남도 현황	69

〈그림 4-44〉 월평균 가구 소득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70
〈그림 4-45〉 다문화가구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70
〈그림 4-46〉 신안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 결과	71
〈그림 4-47〉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72
〈그림 4-48〉 논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72
〈그림 4-49〉 가구당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73
〈그림 4-50〉 식량작물 생산량의 전라남도 현황(M/T)	73
〈그림 4-51〉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74
〈그림 4-52〉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74
〈그림 4-53〉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의 전라남도 현황	75
〈그림 4-54〉 신안군 전력사용량	76
〈그림 4-5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7
〈그림 4-56〉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79
〈그림 4-57〉 고용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0
〈그림 4-58〉 취업자 연령별 분포	80
〈그림 4-59〉 실업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0
〈그림 4-60〉 경제활동인구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1
〈그림 4-61〉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81
〈그림 4-62〉 취업자 수의 전라남도 시군 평균 비교	81
〈그림 4-63〉 청년고용률의 전라남도 비교	82
〈그림 4-64〉 사업체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3
〈그림 4-65〉 신안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현황	83
〈그림 4-66〉 신안군 1인당 도시면적 현황	84
〈그림 4-67〉 도로포장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4
〈그림 4-68〉 주택보급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85
〈그림 4-69〉 빈집비율 전라남도 비교	85
〈그림 4-70〉 빈집 활용 방안 비교	86
〈그림 4-71〉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의 전국 비교	86
〈그림 4-72〉 예산 결산 총괄의 전라남도 현황	87
〈그림 4-73〉 재정자립도의 전라남도 현황	88
〈그림 4-74〉 재정자주도의 전라남도 현황	88
〈그림 4-75〉 범죄 발생 건수의 전라남도 현황	89

〈그림 4-76〉 화재 발생의 전라남도 현황	89
〈그림 4-77〉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액(백만 원)의 전라남도 현황	90
〈그림 4-78〉 풍수해 발생의 전라남도 현황	90
〈그림 4-79〉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전라남도 비교	91
〈그림 4-80〉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93
〈그림 4-81〉 공무원 수의 전라남도 현황	93
〈그림 4-82〉 민원서류 처리 건수의 전라남도 현황	93
〈그림 4-83〉 정보공개율의 전라남도 현황	94
〈그림 4-84〉 종합청렴도의 전라남도 현황	95
〈그림 4-85〉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현황	95

제5장 신안군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그림 5-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108
〈그림 5-2〉 신안군의 모든 시정 콘텐츠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	110
〈그림 5-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단계별 추진 과정	111
〈그림 5-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고도화 계획(안)	112
〈그림 5-5〉 신안군 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제안(안)	112
〈그림 5-6〉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영에 관한 기본전략 구상(안)	115

제6장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언

〈그림 6-1〉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환류체계	139
〈그림 6-2〉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제 적용 절차	142

제1장

보고서의 개요

1. 배경과 목적

□ 배경과 필요성

-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 차원의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주류화를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으로 유지되는 상태임
 - 지금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보편적 욕망을 담은 인류의 공통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별 최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임
- 신안군은 갯벌, 천일염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 개발이익 공유화, 버스 공영제와 같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을 세우며, 지속가능발전의 사례를 통해 국내외 선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정책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의 증진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

□ 목적

- 신안군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할 진단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체계를 활용
 -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안군의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해 신안군의 지속가능성의 현 주소 파악 및 향후 개선 과제 도출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정책 과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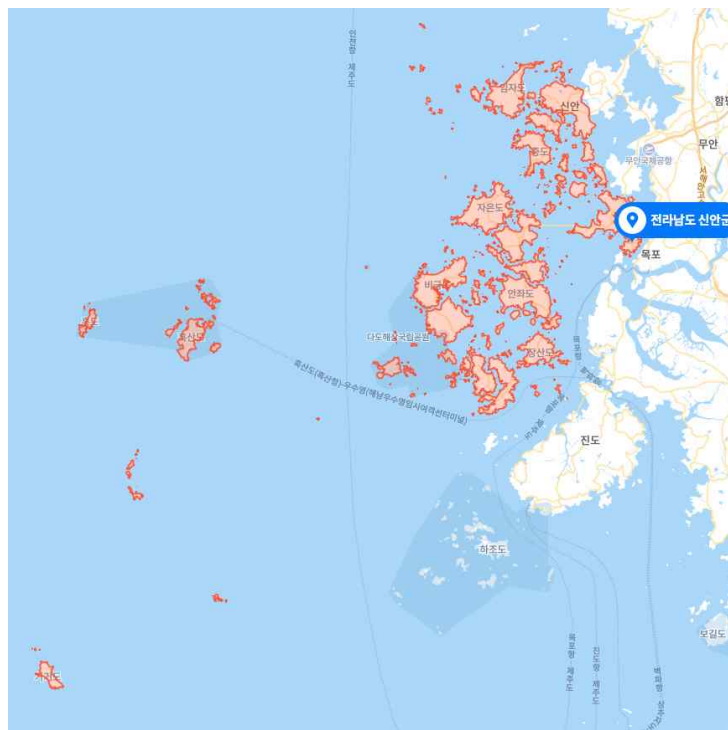
2. 범위와 방법

□ 시간적 범위

- 2012~2022년(10개년)
 -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 방법론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통계 및 각종 기본계획의 자료를 토대로 자료 수집 및 활용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2030년 목표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언

□ 공간적 범위

- 신안군 행정관할 구역 내의 지속가능성 현황



〈그림 1-1〉 신안군의 위치와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변화 추세 파악
-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평가
- 신안군 지속가능성 종합평가와 개선과제 제언

3. 보고서의 세부 내용

- 지속가능성 관점으로 신안군의 기초현황을 조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신안군 주요 통계 자료를 정리
 - 신안군 통계연보, 사회조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료 수집
 - 법정 계획을 기반으로 관련 현황 조사 및 정리
 - SDGs 17개 목표에 부합하게 자료 재정리 및 분석을 통해 신안군의 지속가능성 기초 자료 작성
- 기초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관점의 진단과 평가
 -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 분석 : 과거 5년간의 변화를 토대로 추세 분석
 - 타 지역과의 상대 비교를 통한 현 상황 진단 : 전국 평균 또는 전라남도 평균으로 상대 비교
 - 추세분석과 상대 비교를 통한 신안의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분석 및 진단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표 작성
 - 유엔 글로벌 의제의 체계에 맞는 17개 목표 제시
 - 지속가능성 지표의 통계 변화 추세 분석
 - 국내외 주요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지표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안군 지속가능성 진단
- 신안군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및 개선 과제 제시
 - 신안군의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모델 지역으로 신안군의 전략 수립 및 방안 제안

4. 보고서 작성의 추진체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국제적 흐름

□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정의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에서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정의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용함
-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함

○ 지속가능발전법의 제2조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제2조 1)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제2조 2)

□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배경

○ 인류 역사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현재 사용하는 의미와 유사한 형태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됨

- 한스 칼 폰 칼로위츠(Hans Carl von Carlowitz)는 1713년 작센(Saxony)의 사라지는 숲에 대한 반응으로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음

○ 1962년 “침묵의 봄”

-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DDT 등의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됨. 지구환경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고조되면서 1970년 ‘지구의 날’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유엔인간환경회의와 "인간환경선언", 유엔환경계획기구 발족

-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함
-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선포함
- 1972년 12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이 발족함

○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됨. 브룬트란트 보고서는(Brundtland Report)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함

○ 1992년 리우회의(UNCED)와 ‘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¹⁾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대표들은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함. UN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창설이 합의함²⁾

1) 리우회의(Rio Summit),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등의 별칭으로 잘 알려짐

2) 정상급회의와 별개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를 개최하였고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

-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55차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함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와 ‘요하네스버그 선언’
 -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함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UNCSD)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 ‘녹색경제’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의제를 채택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함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함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함
 -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선언함

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을 채택함(출처: <http://www.ncsd.go.kr/background?content=1'지속가능발전>)



〈그림 2-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배경

출처: 김기곤 외(202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9.

- 2015년 UN의 SDGs 채택 이후, 국가의 대응 외에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지속불가능성의 문제가 MDGs(새천년개발목표)에서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닌, 다수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문제임을 인식함
 -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런던, 서울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고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함
 - 뉴욕시 등은 기존 도시기본계획(One NYC)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추가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
 - 유럽연합은 통계국(Eurostat)이 행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득가능한 통계치에 기반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매년 갱신, 관리
- 유엔은 매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각 나라별 변화와 현황을 조사해 발표함
 -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는 SDGs 이행을 위한 전세계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의 SDGs 이행결과를 종합 점수로 제공하고 있으며, SDGs 각 목표별로도 달성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함
 - SDG 지수에 따라 2022년 보고서에서 1위는 핀란드(86.51), 그 다음으로 덴마크(85.63), 스웨덴(85.19)이며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 지역 OECD 국가들이었으며, 일본이 19위(79.58점), 우리나라는 27위(77.90점)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SDGs 항목별로는 SDGs 6(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항목은 우수하나 SDGs 10(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s 1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SDGs 15(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등 불평등 감소, 해양 및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목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UN SDSN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23년)

*출처: UN SDSN.

□ 지속가능발전의 국내 배경

○ 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 측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

○ 1990년대 - 환경 사건 발생과 위기의식, 그리고 '의제21'

-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서도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함
-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함
- 1996년에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2000년대 이후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과정

- 2000년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음.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함
-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함(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 이행과제 수립)

○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과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함
- 2012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가 발간됨
- 2014년, 2016년, 2018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2016년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이 수립·시행됨(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 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9월에 채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재제정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2022년 1월 4일에 제정, 7월 5일부터 시행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7조 및 제20조)
 - K-SDGs의 4개 전략인 번영, 사람, 환경 및 평화·협력에 해당하는 각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함(제23조부

터 제26조까지)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자료제출 요구,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등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현황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UN-SDGs)

○ 2015년 MDGs 만료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마련

- MDGs 이행 목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에 동의함
- 유엔은 향후 15년(2016-2030년)동안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고, 17개의 새로운 목표 또는 글로벌 우선순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도출함

구 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범위	절대 빈곤 중심 (빈곤·의료 등 사회분야 중심)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달성 주체	정부중심의 참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재원 마련	ODA 중심(공적개발원조)	개도국 내 세금, ODA, 민간재원 (무역, 투자) 등 다양한 재원
MDGs와 SDGs 공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 MDGs 1, SDGs 1, 2 • 교육 : MDGs 2, SDG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MDGs 6, SDGs 3 • 평등 : MDGs 3, SDGs 5
추가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6, 7, 8, 10, 13, 16 등 불평등, 인권, 일자리 제공, 세분화된 환경문제 등 새로운 논의 범주와 목표이행의 범위 확장 	

[표 2-1] MDGs와 SDGs 비교

- MDGs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그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SDGs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

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쓰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할 SDGs를 마련함

- MDGs는 유용한 개발 의제였지만 목표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SDGs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MDGs보다 한층 더 발전된 의제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므로 각 국가는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되었음

○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 2030의제)가 채택됨



〈그림 2-3〉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함
-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DG 1부터 SDG 6은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사회 분야
 - ✓ Goal 1. No Poverty(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 Goal 2. Zero Hunger(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 Goal 4. Quality Education(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 Goal 5. Gender Equality(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 ✓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SDG 8부터 SDG 11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관련한 경제 분야
 - ✓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 ✓ Goal 10. Reduced Inequalities(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SDG 7·12·13·14·15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 보호와 관련한 환경분야
 - ✓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 Goal 13. Climate Action(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 Goal 14. Life Below Water(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Goal 15. Life on Land(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SDG 16은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목표
 - ✓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 SDG 17은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과 관련한 목표
 - ✓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 SDGs를 중심전략으로 채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총괄 기구와 별도의 전략을 두고 국가의 현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덴마크는 부처 간 SDGs 작업반(Inter-ministerial SDG work group)을 총괄기구로 두고, SDGs 전략을 행동계획으로 제시
 -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방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제시

- 말레이시아는 국가SDGs의회(National SDG Council)를 두고 말레이시아의 SDGs를 위한 실행 로드맵(Roadmap for Implementation of SDGs Malaysia)을 전략으로 설정

○ 각 국가는 UN 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척도로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각 국가는 주요 추진 전략을 목표별, 지표별, 소관 부처별, 운영 방법 등을 별도 설정하면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활용하고 있음

- 덴마크는 SDGs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SDGs를 달성하고 정책 입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통합하기 위해 협력하는 추진 체계를 확립함
- 이를 위해 2030 의제와 SDGs 채택에 이르기까지 시민 사회, 기업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등장과 의의

○ 국가 목표 작성의 필요성과 과정

-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음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함.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함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함.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따라 정부 대신 민간 전문가 작업반에서 수립과정을 진행했으며,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보강함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

년~204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담고 있으며,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K-SDGs 목표 및 지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함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개편 방향성

- 기존 K-SDGs 17개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
-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 보완(122개 세부목표, 214개의 지표 →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
- K-SDGs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17개 목표별로 제시
- 향후 5년 중점 추진 및 관리 필요한 정책목표 및 지표 선정

○ K-SDGs 추진체계와 수립과정

-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과 달리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됨. 정부는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 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함
- 2018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K-SDGs 추진계획을 보고 한 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함
- 환경부는 2018년도에 K-SDGs 수립의 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함

○ K-SDGs 비전 및 전략

- (비전) 포용성을 강조하는 정부 지향점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 반영
 - (2018)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 (2020)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실현
- (전략) 기존에 수립한 5대 전략의 핵심 가치인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은 계승하되, 평화와 협력을 통합하여 4대 전략 마련함

제3장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1. 국제 정책의 동향
2. 국내 정책의 동향
3. 시사점

1. 국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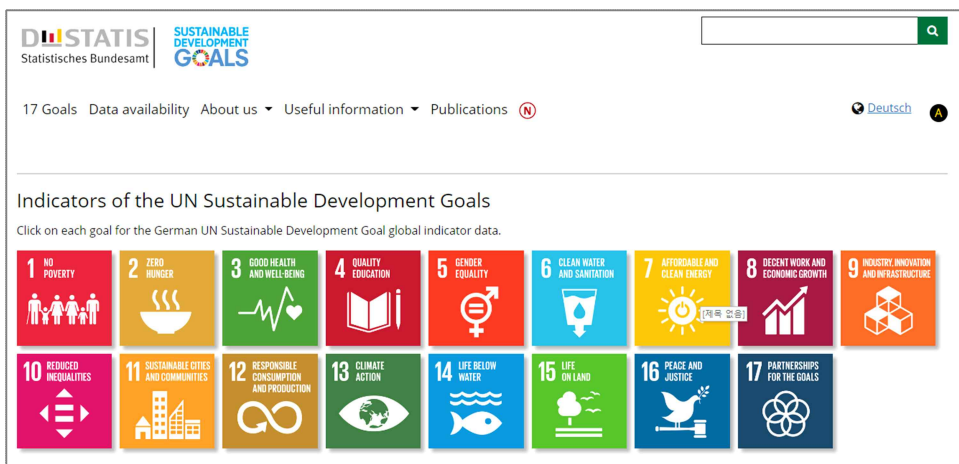
1) 해외 주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사례

□ 독일

- 2001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하였고,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기존 국가발전전략의 SDGs 연계 강화를 위해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NSDS)를 개정, 연방정부의 정책 정합성 기능 제고
 - NSDS을 SDG 3가지 차원(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 2016년, 2018년 개정하여 장기적 정책개발 프로세스 설정
 - 2016년 독일 연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보고서 발표
 - 국가개발전략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총리 주도의 조정체계 구축
 - SDGs 이행시 글로벌 공공재 및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
 - 연방정부는 16개 주 정부와 정기적인 대화체 운영(주정부는 연방정부의 NSDS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11개 주 정부는 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Charter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개발에의 CSO 참여를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이래 약 100여 개 기관이 공개토론에 참여
 - 2021년 3월 독일연방정부는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계속 발전’을 의결함으로써 독일 국내 및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전과 달리 지방정부 역시 중요한 전략의 주체로 판단해 포함하는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2021)은 연방부처에서 각 부처가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조치를 평가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리 개념(sustainability management concept)’을 채택
 - 지속가능발전 원칙, 평가지표와 목표, 모니터링
 - 39개 영역에서 주요 지표 측정
 - 2년 주기로 통계청은 평가지표 보고서를 작성

○ 지표 평가와 환류

-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업데이트
-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의 정기 모니터링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의회 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위원회 및 주(Länder)의 연계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현재 수준에 대한 제언



〈그림 3-1〉 독일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

□ 영국

-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위해,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를 중심으로 SDGs 목표 이행을 진행
 - SDGs 목표 이행을 국제개발부 장관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이행을 조정
- 영국 중앙정부는 해당 자료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단일부처 계획을 통하여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경과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 영국의 담당 부처·부서들은 개별적으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보고서 발간
- 영국은 국가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모든 세부지표 결과치를 웹상에 공개하는 'SDGs 데이터센터'를 운영

- 센터는 세부지표 결과 이외에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SDGs 관련 보고서 및 소식도 종합적으로 제공

- 영국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SDGs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이행과정을 보여줌

○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SDGs 데이터센터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해외 국가들이 자국의 SDGs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기여

SDGs 목표	주관 부서
1. 빈곤종식	노동연금부
2. 기아퇴치	환경식품농촌부
3. 건강한 삶과 웰빙	보건사회복지부
4. 양질의 교육	교육부
5. 성평등	평등사무소
6.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식품농촌부
7. 깨끗한 에너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8. 양질의 일자리	HM 재무부
9. 산업, 혁신, 인프라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10. 불평등 해소	평등사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식품농촌부
13. 기후위기 대응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14. 해양 생태계 보전	환경식품농촌부
15. 육상 생태계 보전	환경식품농촌부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내무부
17. 파트너십	국제개발부

[표 3-1] 영국 정부의 목표별 주관부처

□ 스위스

- 헌법(1999년 개정)과 연방의회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 2008~2011, 2016-2019」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정 받음
 - SDS 2016-20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지속가능개발을 주류화하여 3가지 차원의 균형 접근 도모
 - SDS 지속가능정책 가이드라인은 미래에 대한 책임 강조를 통해 미래세대를 고려하고 있음
 - 연방위원회(스위스)에서 국내·외 정책 간 연계 강화
- SDS에 정책 정합성 중요성 강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SDG 정책 형성의 모든 절차에서 폭넓은 SDGs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목적으로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

□ 미국 뉴욕 : ‘OneNYC 2050’

- 미국 뉴욕시 2015년 4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OneNYC2050’ 수립
 - 인구 증가, 인프라의 노후화, 불평등 증가, 기후변화 등의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포용적인 성장과 기후행동을 위한 전략계획인 “하나의 뉴욕 : 강하고 정의로운 도시(OneNYC)”를 발표
 -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 수립(2019.4.22.) 및 그린뉴딜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활성화법)’를 통과시켜(2019.4.18.) 그린뉴딜 추진 기반 강화
 - 그린뉴딜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선도 사례
- 기존 정책과의 연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자발적 평가 보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



〈그림 3-2〉 미국 뉴욕의 OneNYC 2050과 SDGs의 관계

□ 영국 브리스틀 : ‘The One City Plan’과 SDGs

- 2019년 영국 브리스틀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558개 시책이 담긴 ‘The One City Plan’ 발간
 - 기존에 추구해 왔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노력을 유엔 SDGs의 체계와 연계함. 이 과정에서 대시보드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 목표와 전략,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피드백 함
 -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2022년 두번째 ‘자발적 지역 평가(VLR: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 발간함
 - 이 보고서는 SDGs를 해결하기 위한 브리스틀의 도시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고 도시를 보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브리스틀 기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영국의 여러 핵심 도시를 인터뷰한 VLR에는 SDGs를 제공하는 영국 지방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검토도 포함함



〈그림 3-3〉 영국 브리스틀의 VLR(자발적 지역 보고서, 2019, 2022년)

2) 주요 섬 지역의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 실천 노력

- 섬 지역은 SDGs 달성에 있어 특별한 도전과 기회를 갖고 있음
 - 섬은 지구의 5% 미만을 차지하지만 세계 인구의 약 10%를 거주하고 있음
 - 따라서 자연 재해, 기후 변화 및 인구 증가에 취약한 반면,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음
- SDGs는 섬 지역이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SDGs는 섬 지역이 환경 보호, 경제 성장, 사회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지원
- 섬 지역의 SDGs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해양 자원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몇 가지 특정 사례 소개
 - 기후 변화 대응
 - 섬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제방을 건설하고, 태풍을 대비하는 건물 보강,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와 관개 시설을 구축함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 섬 지역은 해양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섬 지역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함
 - 예를 들어,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 보호 지역을 설정함
 - 재생 에너지
 - 섬 지역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섬 지역은 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함
 - 지속가능한 관광
 - 섬 지역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예를 들어, 친환경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에게 관광 수익을 환원하고 있음

□ 일본 이키 시 : 지속가능한 섬의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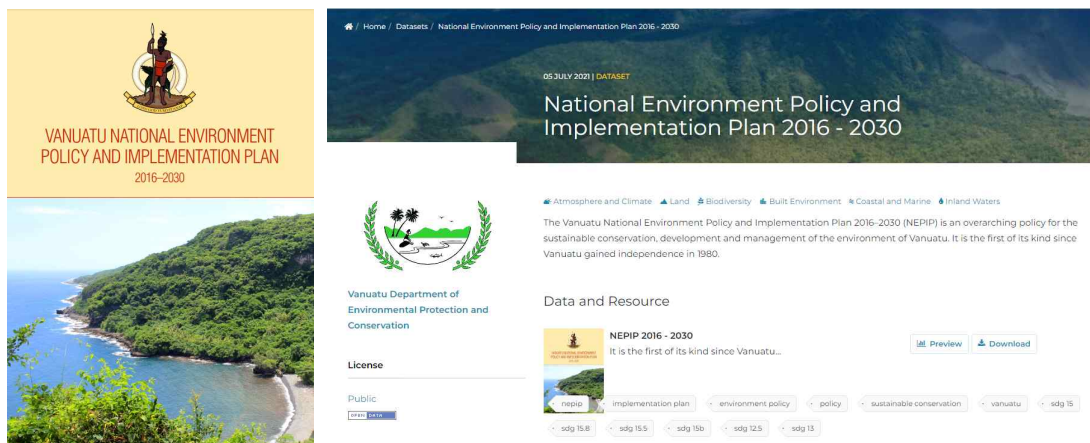
- 나가사키 현의 이키 시는 'SDGs 미래 도시 모델' (29개 도시 선정)
 - 일본은 SDGs를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에 지속가능성을 요구
- 일본 나가사키 현의 이키 시는 인구 26,000명, 도로와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신사가 있는 녹음이 우거진 환경을 가진 섬 지역
 - 일본의 고령화는 이키 시에도 나타나고 있음. 65세 이상 시민의 비율은 37%(2020년 5월), 2030년에는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기후 변화는 이키 시의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해수온 상승으로 이키 시 주변의 해조류가 감소했고,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어획량은 연간 6,560톤에서 4,408톤으로 거의 50% 감소
- 이키 시, 'SDGs 미래과'와 '이키 미래창조 프로젝트' 창설
 - 2018년 시에 SDGs를 도입하고 'SDGs 미래과' 설치
 - 현재 약 80%의 시민이 SDGs를 이해(일본 평균 29%)
- 미래창조대화 실시
 - 섬 안팎의 다양한 재능을 모아 참가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의 문제를 논의
 - 2015년부터 1차 대화가 진행되어 2,000명 이상의 시민과 학생이 모임
 - 2020년 2월 현재 42개의 이슈를 다루었고, 그 중 30개는 미래 창조 대화에서 탄생한 솔루션을 채택
- 혁신 여름 프로그램
 - 미래 창조 대화는 이키 시의 문제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점을 활용
 - 이키 시에서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계획, 혁신 및 프레젠테이션을 수행
- 스마트 농업과 이키의 적극적인 홍보
 - 친환경 농업과 음식물 쓰레기 방지를 촉진하는 Iki의 아스파라거스 프로젝트



〈그림 3-4〉 일본 이키섬의 전경과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

□ 바누아투 :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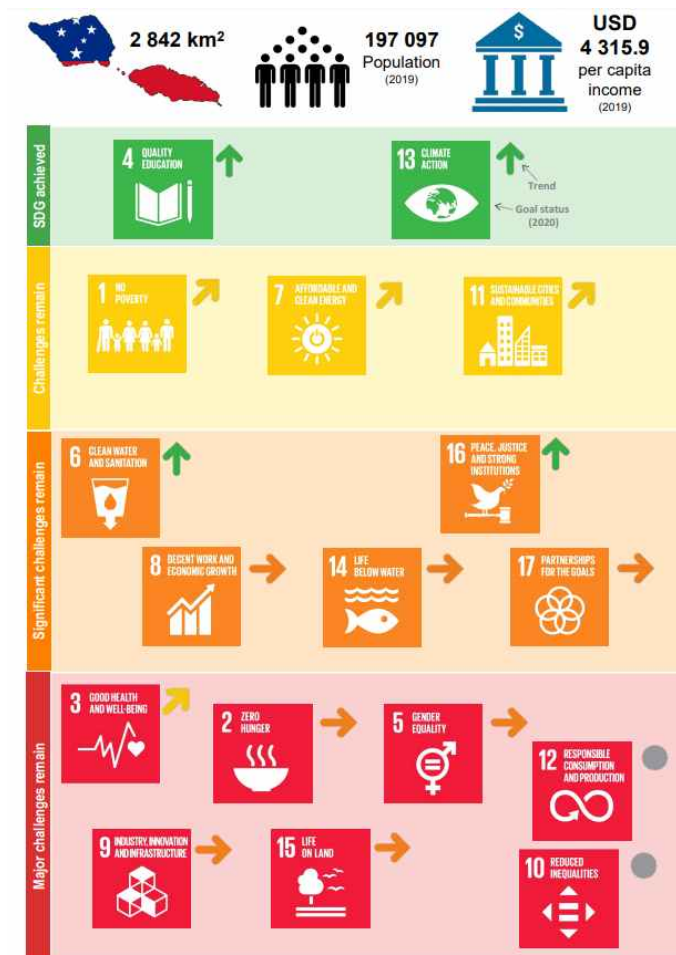
- 2019년 바누아투는 2019-2030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시작하고 지속가능한 섬 관광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 및 환경 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바누아투는 여행 제한이 해제되어 관광객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We'll keep it Beautiful for You'와 'We're Saving You a Spot'이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가지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
 -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 산업을 개발하고 관리
 - 방문자는 바누아투의 환경, 문화 및 사람들과 연결
 - 책임감 있고 가치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 지원 및 판매되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 바누아투의 환경 및 문화 자원을 향상, 보존 및 보호하는 관광
 -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은 바누아투와 그 국민의 수입과 복지를 향상



〈그림 3-5〉 바누아투의 환경계획과 환경데이터포털
출처: VANUATU ENVIRONMENT DATA PORTAL

□ 사모아 : SDGs를 활용한 개발협력의 틀 조성

- 사모아는 대부분의 태평양 국가들의 평균적인 상황이며, SDGs 채택에 가장 앞장선 지역
 - 사모아는 회복력을 향한 로드맵으로서 SDGs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SDGs에 대한 정부 간 조정 및 협의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하며 SDG 데이터의 가용성을 매핑
 - 새로운 국가 전략, 부문 계획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SDG 지표 프레임워크에 의해 점진적으로 정보를 제공



〈그림 3-6〉 사모아의 SDGs 평가 결과

*출처: OECD(2021),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E SDGS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 CASE STUDY OF SAMOA.

- 결과를 위한 공유 프레임워크로서 SDGs를 사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 사례

- 사모아가 국가 및 부문 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SDG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은 개발 협력에서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 부합
- 사모아는 다음 2021-25 계획 주기에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일부 SDG 목표와 지표에 대한 데이터 빈도나 세분화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대부분의 SDG가 충분한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좋은 파트너십 관행과 결합하여 사모아에서 결과를 위한 공유 프레임워크로서 SDG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사모아와 개발 파트너를 위한 기회와 빠른 성과

- 대부분의 개발 파트너는 책임 및 보고 목적으로 SDG 프레임워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 기반 관리 접근 방식을 잘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주요 파트너가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부족이나 부문별 부처 또는 조정 메커니즘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한 문제도 여전히 존재
- 개발 파트너는 사모아의 원조 정책(예: 공동 정책 실행 매트릭스)에서 요청한 대로 모니터링 및 평가 요건을 더욱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재무 모니터링을 넘어 SDG 지표(예: 사회적 차원)를 고려하는 정부 소유의 결과 프레임워크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 개발 파트너들은 전략 계획, 국가 내 역량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범정부적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모아의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공유된 결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SDG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모아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은 기부자 간 협력과 연계 접근법의 증가를 촉진

- 개발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불러 일으킴
 - SDG 렌즈로 적용하면 사모아가 개발 성과에 대한 SDG 기반 공유 프레임워크로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됨
- 개발 파트너는 결과 기반 관리를 위해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팬데믹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역량과 인적 자원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모아와 같은 국가에서 거래 비용과 보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

□ 광역자치단체 주요 정책 동향

○ 서울특별시 : 17개 UN SDGs형 목표

- 2013년 9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2014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
- 2018년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신을 따라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2016년에 만들어진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초안은 서울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16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되었고, 2017년에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특별팀의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 거듭 수정. 수정된 초안은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의견 수렴 토론회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수정되었고, 각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최종안이 수립
- 2020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완료시점에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0~2024) 목표체계 재구조화
 - 서울시는 SDGs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4대 범주와 4대 전략, 그리고 5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고, 실질적으로 전환도시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모색함

○ 충청남도 : 17개 UN SDGs형 목표

- 2018년 7월 ‘충남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2018년 전국 광역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수립
 - 전담부서를 두고 이행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SDGs를 각 부서의 성과관리와 연계함
 -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에 의한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보고서 2020 발간

○ 광주광역시 : 17개 UN SDGs형 목표

- 2015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
- 2018년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기반으로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거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하고 선포함
 - 'SDGs 2030'은 2015년 UN의 'SDGs 2030'을 적극 수용해 수립한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2018년 1월부터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
- 2020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2022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안) 수립
- 2023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안) 작성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 및 의결 준비 중

지역명	수립연도	작성과정의 특징
서울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로 작성 • 과정(2016.03~2017.11): 학술용역 1건, 분야별 대토론회, 수립 소위 구성 후 워크숍 2회, 심층검토 T/F, 간담회, 전체회의 심의, 서울 SDGs(안) 시민 의견수렴 (온/오프라인) • SDGs 17개 목표, 전문, 총론, 세부목표 96개
광주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5년 단위 의제 작성 및 제1차 지속가능발전 광주이행계획을 토대로 작성 • 광주시와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 중심으로 초안 작성 •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유관기관 등 2차례 의견수렴 시행 • 17개 목표, 66개 세부목표, 104개 지표 선정 후 선포식 개최
충남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풀 구축, 도민설문조사 및 전략·지표 기본안 마련 •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17개 목표, 61개 전략, 231개 지표안 중 62개 지표 선정
충북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작성 • 환경, 경제, 사회의 3대 목표, 16개 전략으로 구성 • 기존 기본계획과 연구과제 형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충북 SDGs로 구성하진 않음 •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 기회가 크게 부각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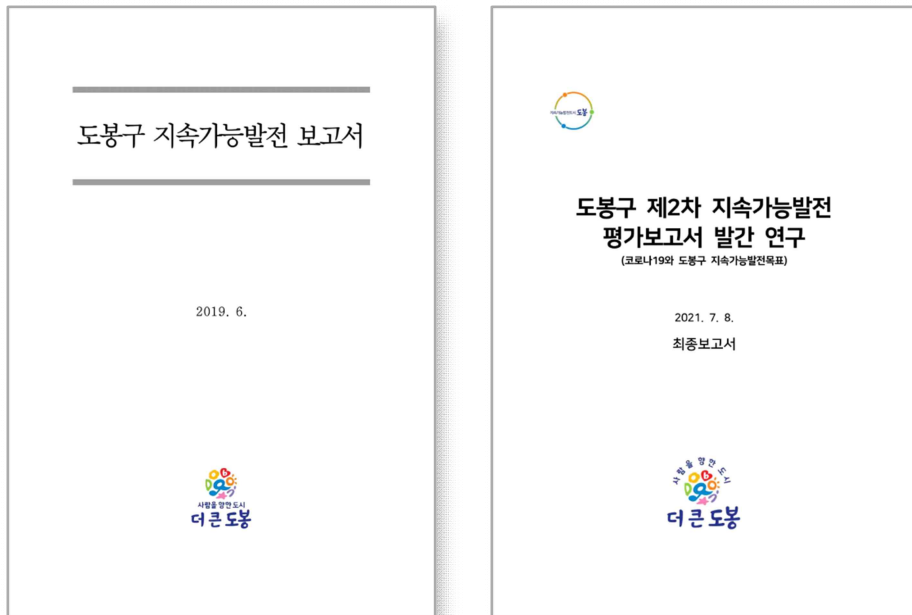
경기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 전문가, 행정,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설문조사, 자문회의,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참여 • 17개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 확정 후 민관공동 선포
전남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작성 • 환경, 사회, 경제 3대 전략, 17개 과제, 61개 세부목표로 작성 • 수립과정에서 지역내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이 보이지 않음
부산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연구원 중심으로 작성 • 시민, 전문가 설문조사(전문가 63명, 부문별 각 21명, 2019년 6월 실시) • 시민공론화(원탁회의) : 부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연구원 공동주관 2차례 개최 • 17개 목표, 98개 세부목표, 315개 지표(안) 작성
대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작성했고,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해 함께 작성 • 경제,사회,환경,도시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전망을 토대로 대전-SDGs구축을 위한 부문별 비전과 목표가치를 설정 • 17개 목표, 51개 세부목표, 61개 지표 설정
전북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구소의 연구용역 방식으로 작성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수렴 • 12개 전략, 50개 실행과제, 77개 관리지표로 구성
인천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작성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목표 수립 • 선행연구 및 인천광역시 현황 검토, 핵심과제 도출 •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 관계자, NGO, 인천시 관계공무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 연구진 등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 3대 전략, 17개 핵심전략, 30대 세부목표
대구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SDGs 비전, 목표, 전략 등 초안 작성 후 의견수렴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 별도 검토, 전문가, 시민단체 공론화 및 숙의 협의, 시민 주도 중점 이행과제 제안 • 17개 목표, 74개 세부목표, 92개 평가지표 체계 구성
강원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및 분석, 초안 작성 후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및 행정부서 지표 조서 및 단위과제 작성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견취합(광역1, 기초10),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 및 행정부서 검토 및 의견수렴 • 4대전략, 17개 목표, 37개 세부목표로 구성
경남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연구소가 중심이 되었으나, 경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한 목표 설정, 경남-MGoS 6개 그룹 설정 및 숙의공론, 온오프라인 방식 참여 13회 운영 • 경남도청,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진이 함께 이행과제 수립 및 검토 • 17개 목표, 34개 이행계획 중점과제, 68개 중점과제 단위사업

[표 3-2]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작성 과정과 특징 비교(작성 연도순)

□ 기초자치단체 주요 정책 동향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별 추진체계

- 2015년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2016년 전담부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2017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까지 3차 이행계획 발표
 - 도봉구는 민관협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이행계획을 전국 최초 자력으로 수립
 -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담부서 '지속가능발전과'와 거버넌스 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관 중심 행정에서 벗어난 혁신모델 창출
- 도봉구 제1차(2019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발간(2021년)을 했으며 현재 제3차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음



〈그림 3-7〉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 17개 UN SDGs형 목표

- 201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 2018년 주민참여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행정이 참여하여 비전, 목표 도출하고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함께 UN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연계하면서 구의 특색을 담은 17개 목표, 50개 전략, 93개 이행과제, 327개 단위사업을 포함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 2020년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공표
 - 키워드 접근방법을 사용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의 추가·수정이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
 - 지표는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 사회, 경제, 추진기반 4개 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지표 풀을 구축하고 지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총 47개를 확정
 - 2년 주기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를 발간, 2022년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발간

○ 경기도 수원시 : 핵심목표(Focus goal) 17개 UN SDGs형 목표

- 2017년 민·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공동 선언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회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2019년 10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협력
 - 수원시는 이행계획 수립 이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평가를 위해 평가표를 만들고, 각 목표와 사업별로 평가를 수행하는 데 활용하며, 일관성, 유효성, 수평적 정합성, 수직적 정합성, 기타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함
 - 이러한 평가는 시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시의회 -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되며, 평가결과는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발간

○ 충청남도 당진시 : 17개 UN SDGs형 목표

- 2018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부서 워크숍을 통해 이행과제, 발전지표 수립
- 2019년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 이행계획 고도화 중임
- 2020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중간조직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20여 회에 걸친 행정 내부 조정회의를 통해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의제' 15개를 선정
 - 유엔 SDGs의 틀에 맞춰 새롭게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서 SDGs를 수립함
- 2020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분야별 추진체계

- 2012년 지속가능성을 지역의 발전 목표로 설정, 5대 전략과 17개 이행과제 확정
- 2018년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2020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제4차보고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광주광역시 서구 : 17개 UN SDGs형 목표

- 2020년 기본계획 수립
 - 비전, 5대 전략, 17개 과제, 75개 지표 설정
- 2021년 이행계획 수립
 - 지표별 목표치 설정,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준비 중
 - 반기별 각 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이행도 총괄평가 및 분석

○ 강원도 원주시 : 숙의공론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숙의 공론, 거버넌스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도출, 원주시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진이 함께 이행과제 수립 및 검토
- 기본계획(2022~2026년), 이행계획(2022년~2026년)을 기간으로 제시해 수립
 - 비전, 5대 원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지표 17개, 중점과제 17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 114개, 성과지표 125개를 제시하고,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그림 3-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구성 체계

제4장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1. 기초 현황 조사의 개요
2. 환경 (SDG 6, 12, 13, 14, 15)
3. 경제 (SDG 7, 8, 9, 11)
4. 사회 (SDG 1, 2, 3, 4, 5, 10)
5. 법제도와 협치 (SDG 16, 17)
- 6.新安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과 시사점
- 7.新安군 8기 공약과 연계성

1. 기초 현황 조사의 개요

□ 기초 현황 조사를 위한 방법

- 이 장에서는 신안군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69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신안군의 통계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함
- 통계 분석 방법으로, 크게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와 국내외 평균값 또는 다른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기본으로 함
 - 변화 추이 분석을 위하여, 2012년~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 데이터를 취합함. 유엔 SDGs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진전', '답보', '후퇴'로 정리해 지역 내 시간적 맥락에 따른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구분	변화 추이 분석	비교 분석
데이터 취합 기준	2012년 ~ 2022년	전국 또는 전라남도 평균값
평가 기준	기준연도 대비 추세 및 경향	전국 또는 전라남도 평균값 기준 달성 수준
평가 결과	진전, 답보, 후퇴	상(평균 이상), 중(평균), 하(평균 이하)

[표 4-1] 신안군 지속가능성 통계 분석 및 평가 방법

□ 기초 현황 조사의 범위와 구분

- 17개 유엔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평화/제도, 이행수단 등 총 5개 분야를 기본 요소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루는 SDG는 각 국가 및 지역공동체, 그리고 국제기구/기관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
 - 예를 들어, SDG 11(도시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의 기초단위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복지 및 안전망의 기초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 분야 또는 사회 분야로 분류되어 검토됨
 - 또한 SDG 11의 10개 세부목표별로 경제, 사회, 환경, 제도 4개 분야에 걸쳐 연계 검토 가능함
 -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SDG도 단일 분야에 국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러 분야에 걸

쳐 다양한 관점으로 중복해 검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유엔 SDGs 5대 기본 요소를 기준으로 신안군 지속가능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야별 검토 SDGs는 다음 표와 같음
- 다만,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입법, 사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평화/제도’와 ‘이행수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법제도와 협치’로 통합하여 총 4개 주제 분야로 최종 분류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 법제도와 협치로 구분
 - 유엔 SDGs는 5P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의 편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목표별 연계성을 고려해 구분함
 - 환경 : SDG 6, 12, 13, 14, 15
 - 경제 : SDG 2, 7, 8, 9, 11
 - 사회 : SDG 1, 3, 4, 5, 10
 - 법제도와 협치 : SDG 16, 17

구분	분야		연계 검토 및 분석대상 SDGs
유엔 SDGs 5대 기본요소	환경		SDG 6, 12, 13, 14, 15
	경제		SDG 2, 7, 8, 9, 11
	사회		SDG 1, 3, 4, 5, 10
	법제도/협치	평화/제도	SDG 16, 17
이행수단			

[표 4-2] 신안군 지속가능성 분야별 SDGs 연계 분석 기준

□ 기초 현황 조사를 위한 목표별 통계자료 목록

- 기초 현황 조사를 위해 환경, 경제, 사회, 법제도와 협치로 영역을 구분하고, 관련 SDGs 목표로 연계해 조사하고 분석함
- 분석을 위해 사용한 영역별 통계자료 및 지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계자료
환경	6 (물과 위생)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톤/일)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14 (해양생태계 보전)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5 (육상생태계 보전)	임야현황
		해안방재림 조성(ha)
1인당 녹지지역 면적(m ²)		
경제	2 (기아해소)	경지면적(ha)
		가구당 경지면적(a)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ha)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7 (친환경 에너지)	전력사용량(MWh)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8 (양질의 일자리)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천 명)
		취업자 수(천 명)
		청년고용률(%)
	9 (산업혁신)	사업체 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명)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인당 도시지역 면적 (m ²)
		도로포장률(%)
주택보급률(%)		
빈집비율(%)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계자료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mu\text{g}/\text{m}^3$)	
사회	1 (빈곤종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인 등록 현황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현황	
	3 (건강과 웰빙)	의료기관(병원 수)	
		의료기관(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살률(십만 명당 자살자 수)	
	4 (양질의 교육)	학교 수	
		학생 수(초·중·고등학생)	
		적령 아동 취학(입학 상황)	
		공공 도서관과 보유 자료 수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 수	
		문화재	
		체육시설	
	5 (성평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여성폭력 상담	
10 (불평등 해소)	월평균 가구 소득(%)		
	다문화가구 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		
법제도/협치	16 (인권, 정의, 법제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화재 발생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피해 건수, 피해 현황)	
		풍수해 발생(피해액)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역안전지수	
		17 (파트너십)	공무원 총괄
			민원서류 처리건수
	정보공개율(%)		
	종합청렴도		
			주민참여예산액(백만 원)

[표 4-3] 기초현황 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지표 목록

2. 환경 : SDG 6, 12, 13, 14, 15

□ SDG 6 : 물과 위생

○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은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특성상 2017년부터 상수도 보급률이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까지 신안군이 평균 이상이었으나, 2018년부터 전남 평균이 더 높아졌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도서지역의 특성상 상수원의 마련과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그림 4-1〉 상수도 보급률 전라남도 평균과 신안군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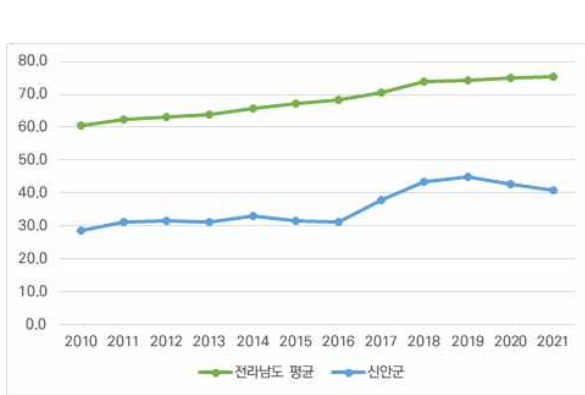
○ 하수도 보급률(%)

-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수도 보급률이 40% 정도 수준으로 전라남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저조함
 - 2010년 30%에 미치지 못하던 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 45%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시 41%로 감소함
 -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2021년 현재 94.8%에 이르고, 전남 역시 82.8%에 이르지만, 신안군은 섬 지역의 특성 때문에 크게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깨끗한 하수처리 정책은 해양생태계 보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하수도 처리 정책으로 각 섬 안에서 하수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수 정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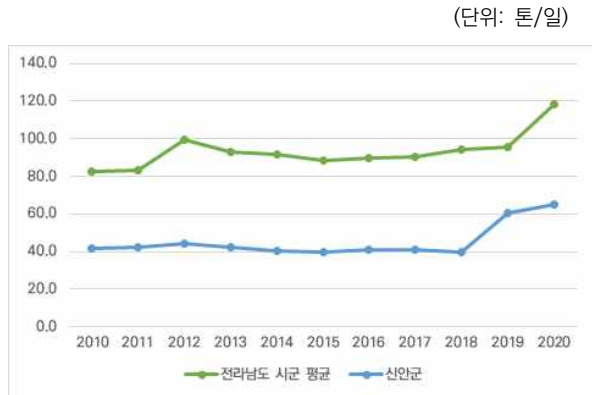
□ SDG 12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톤/일)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까지 4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60만 톤 수준으로 급증함
 -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신안군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대비 2020년 38%가 급증했으나, 전라남도도 군 평균 20% 증가함
 -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그림 4-2〉 하수도 보급률 전라남도 평균과 신안군 비교



〈그림 4-3〉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의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 기본통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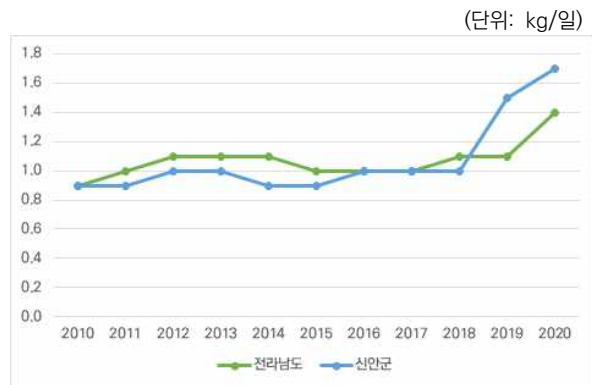
-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증가 추세 속 2019년부터 56% 이상으로 높아짐
 - 2010년 30% 수준의 신안군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2019년 56.3%, 2020년 52.8%로 전라남도 평균 재활용률은 넘어섬
 - 2019년부터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재활용률 또한 상승함.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발생량 자체를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그림 4-4〉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까지 1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1.7kg까지 급격하게 증가함
- 신안군의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2019년 1.5kg, 2020년 1.7kg으로 급증하면서 전라남도의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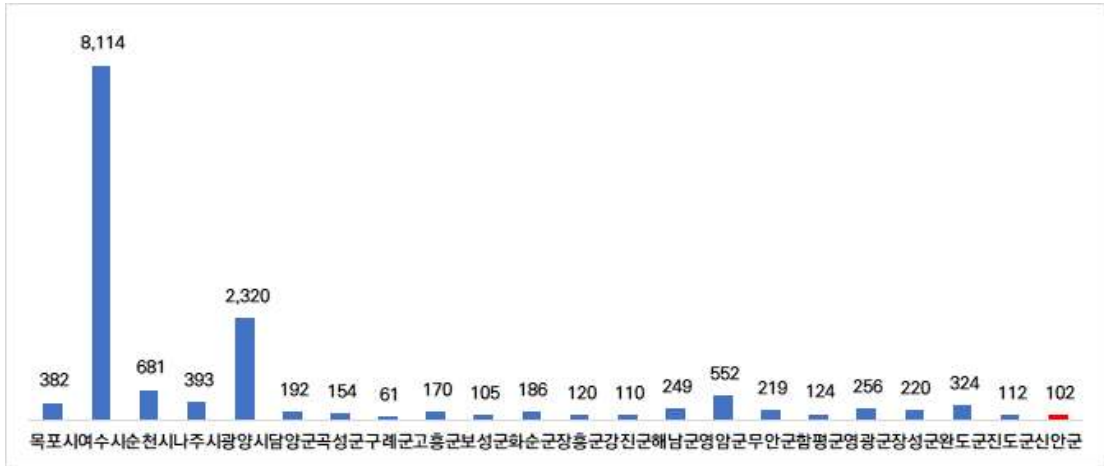
〈그림 4-5〉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의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 SDG 13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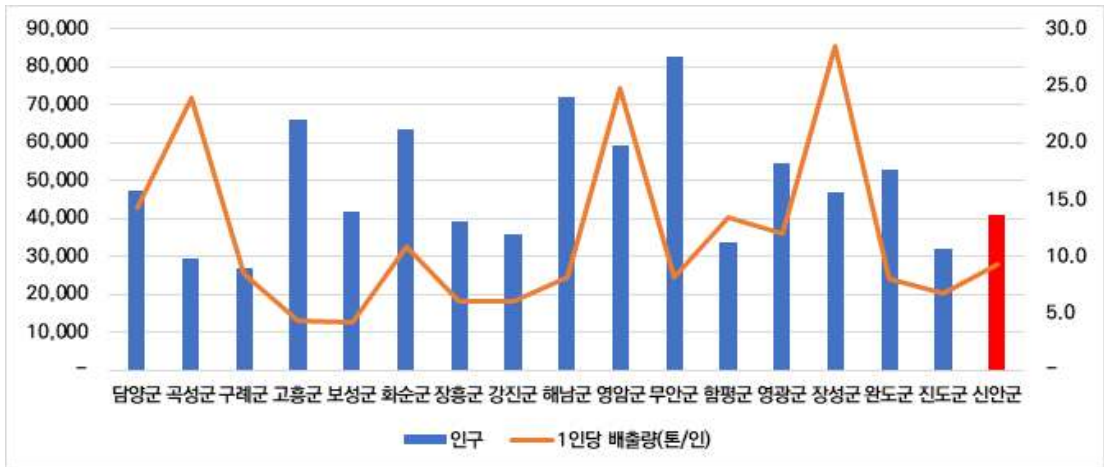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남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직접배출량+간접배출량)은 106.14백만 톤 CO2 eq.(이하, 백만 톤)로 1990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전년에 비해 1.94% 감소



〈그림 4-6〉 전라남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직접+간접배출량, 단위 천 톤,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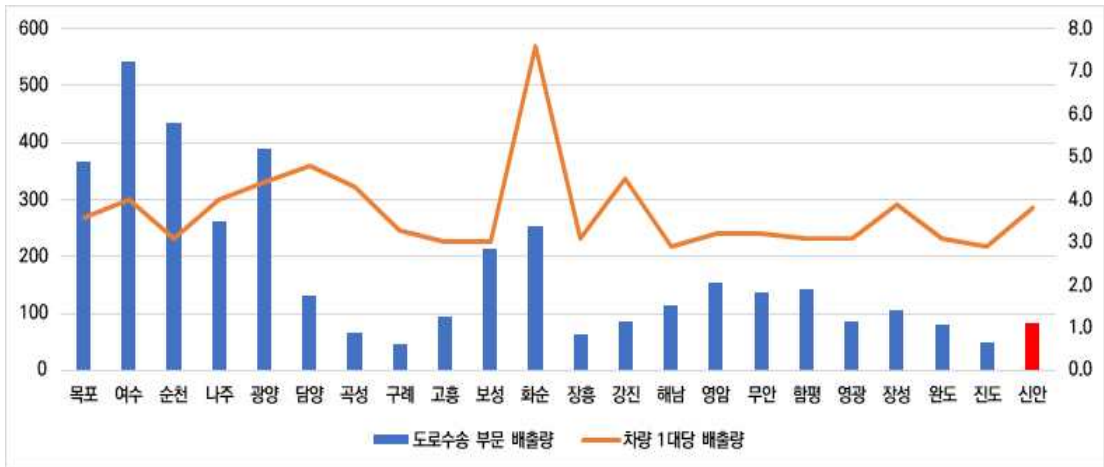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

-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의 합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연료연소와 간접배출량 중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복된 수치
- 시·군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광양, 여수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시설이 없는 신안군은 인구가 많은 전남의 다른 군 지역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남도 군 단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톤/인)을 살펴보면, 내륙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산업의 발생요인을 가진 지역을 제외하면, 신안군은 9.4톤으로 전라남도 군 지역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함
 -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모델을 보이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안군은 8만 4천 톤으로 타 지역 대비 배출량이 적지 않고, 차량 1대당 배출량도 1대당 3.8톤으로 전라남도에서 9번째로 높은 점은 군민의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산과 자가용 중심의 이동 억제 정책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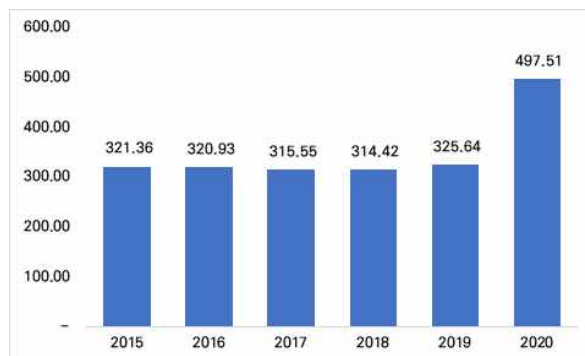
〈그림 4-7〉 전라남도 군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



〈그림 4-8〉 전라남도 시군별 도로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량 1대당 배출량(2020년 기준)

*출처: 전라남도 내부자료



〈그림 4-9〉 신안군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추이(2015~2020), 단위 : GgCO2eq.

*출처: 환경부

- 신안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19년 약간 상승했고, 2020년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2020년 증가분은 모두 수송 부문에서 발생함.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방세 증가라는 세수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수치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온실가스 인지 예산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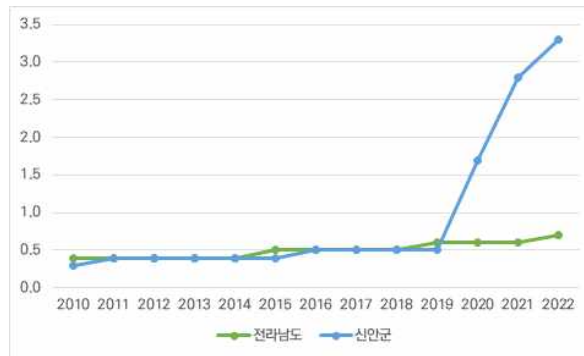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에너지	153.35	330.18
에너지산업	0.02	0.02
제조업및건설업	4.16	3.13
수송	92.56	269.20
기타	1.10	0.21
미분류	5.43	4.16
산업공정및제품생산	2.17	2.13
농업	165.57	160.53
LULUCF	-138.35	-145.16
폐기물	4.55	4.68
순배출량	187.29	352.36

[표 4-4] 신안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2019년과 2020년)

*출처: 환경부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부터 가파르게 치솟아 2022년 1인당 3.3대가 등록되어 있음
 - 전라남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0.4대에서 0.7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하여 급격히 증가함
 - 실제로 2019년 말과 2020년 1월에 걸쳐 렌터카 업체의 관내 등록 차량이 실제 대량으로 유입되어 등록대수가 증가로 나타남



〈그림 4-10〉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_시도별

□ SDG 14 : 해양생태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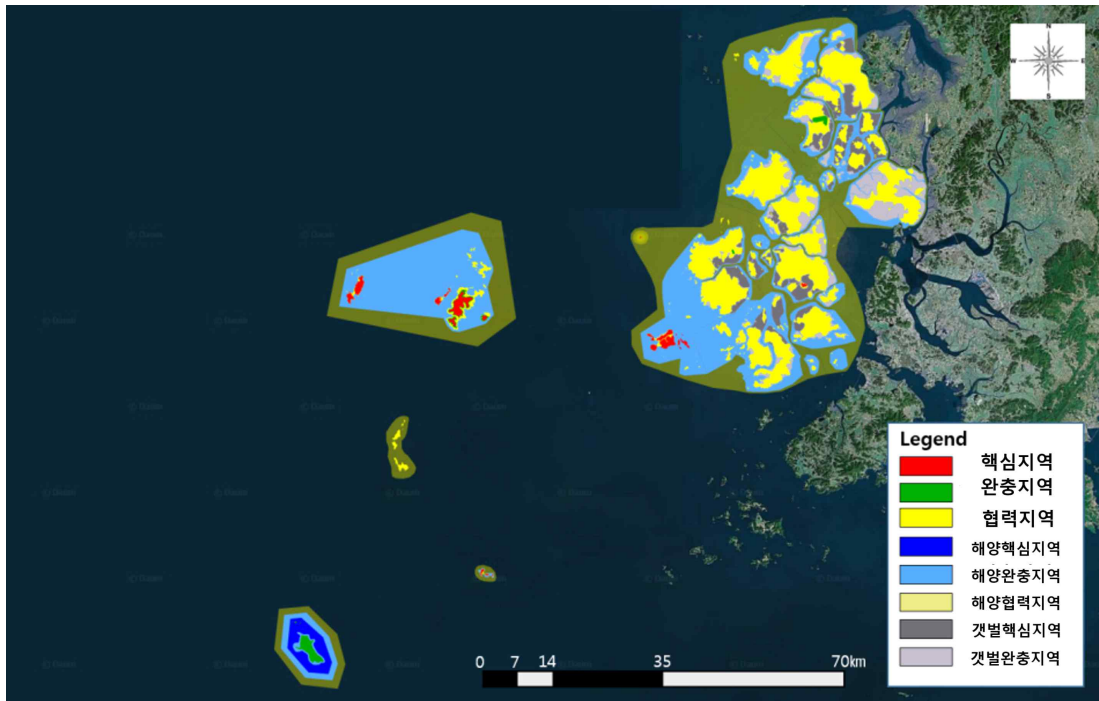
○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지정현황

- 최초 : 573.12km² - 4개면 증도, 비금, 도초, 흑산(2009.5.26)
- 확대 : 3,238.74km² - 14개 읍면(2016. 3. 19) ※ 2,666.62km² 확대

▪ 생물권지역 주요 자원

- 장도 및 증도 람사르 습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및 신안 갯벌도립공원
- 흑산, 홍도 해식애 등 자연절경과 바닷새 번식지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
- 갯벌을 이용해 맨손 어업, 염전, 양식 등 자연과 함께하는 '갯살림문화'



〈그림 4-11〉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구역 현황

○ 람사르 습지 : 2개소 31.39km²

- 장도산지습지(2005.03.30) 0.09km²
- 증도갯벌습지(2011.09.01.) 31.3km²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EAAFP) 서식지

- 비금면 칠발도 0.037km² (육지, 2007.12.01.)

- 압해도 갯벌 25km² (갯벌, 2019.11.12.)
- 습지보호지역 : 2개소 1,100.95km²
 - 장도산지습지(2004.08.31.) 0.09km² (환경부)
 - 신안갯벌습지보호지역(2018.09.03.) 1,100.86km² (해양수산부)
- 가거도주변해양 해양생태계보호구역(2012.11.30.) 70.17km²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522.749km²(해상 464.821, 육상 57.928)
 - 비금·도초(하의일부)권역 226.241km²
 - 흑산·홍도권역 296.508km²
- 신안갯벌도립공원 : 13개 읍면 162.0km²
 - 최초지정 : 12.824km² - 증도면 (2008.06.05.)
 - 1차 확대 : 144.0km² - 10개 읍면 (2013.12.31.) ※131.176km²증
 - 2차 확대 : 162.0km² - 13개 읍면 (2018.02.08.) ※18.0km²증
 - 흑산면 제외, 전체 읍면으로 확대
- 특정도서 : 30개소, 1.7km²

□ SDG 15 : 육상생태계 보전

○ 임야현황



〈그림 4-12〉 신안군 임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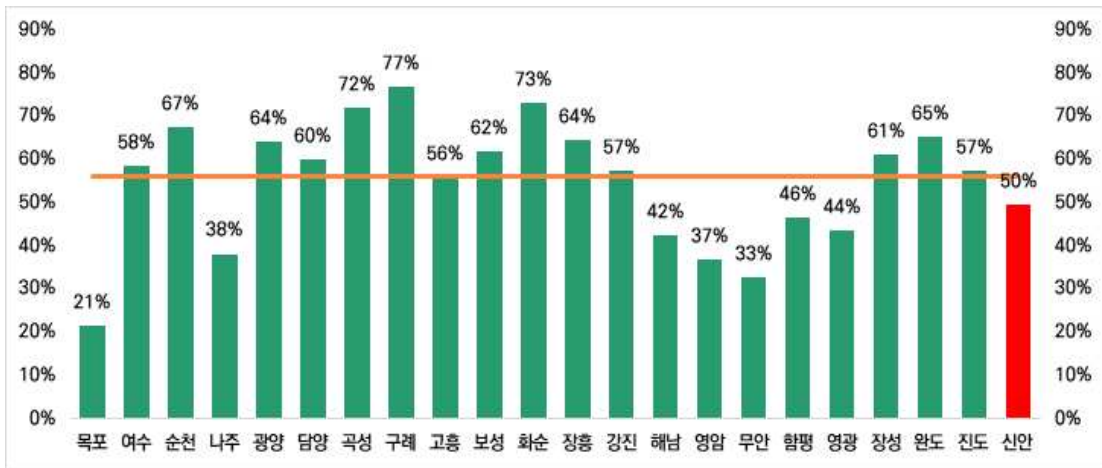
*출처: 신안군 홈페이지



〈그림 4-13〉 신안군 읍면별 임야면적

*출처: 신안군 홈페이지

- 신안군의 임야는 국유림 8%, 공유림 5%, 사유림 87%로 상당부분 사유림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시군별 전체 면적 대비 임야 비율은 평균 56%이고, 신안군은 50%로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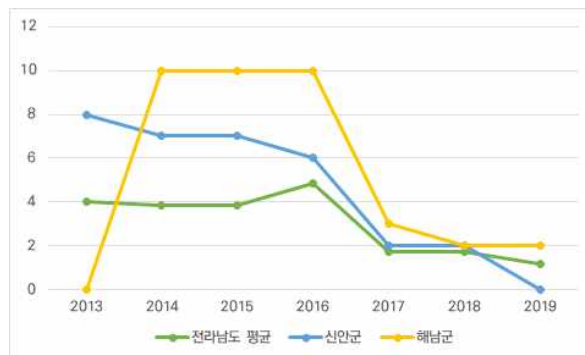
〈그림 4-14〉 전라남도 시군별 전체 면적 대비 임야비율

- 신안군 나름대로 다양한 공원 녹지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임야만을 놓고 볼 때는 향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성과 확대가 요구됨
- 다양한 녹지·문화공간·공원 조성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 조성

- 섬 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
- 소통·화합의 상징인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 주민들이 참여한 생활환경숲 조성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 산림 조성
 - 조림 및 숲가꾸기
 - 사방사업과 임도
 - 산림병해충방제
- 2022년『전라남도 도시숲』우수사례 공모 우수상과 『전라남도 산림환경 대상』 수상

○ 해안방재림 조성(ha)

- 신안군은 산지사방사업 중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만 진행하고 있음. 신안군은 전라남도 평균보다 넓은 해안 방재림을 조성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조성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조성하지 않음
- 유사도시인 해남군의 사업 면적 규모에 비해 신안군은 적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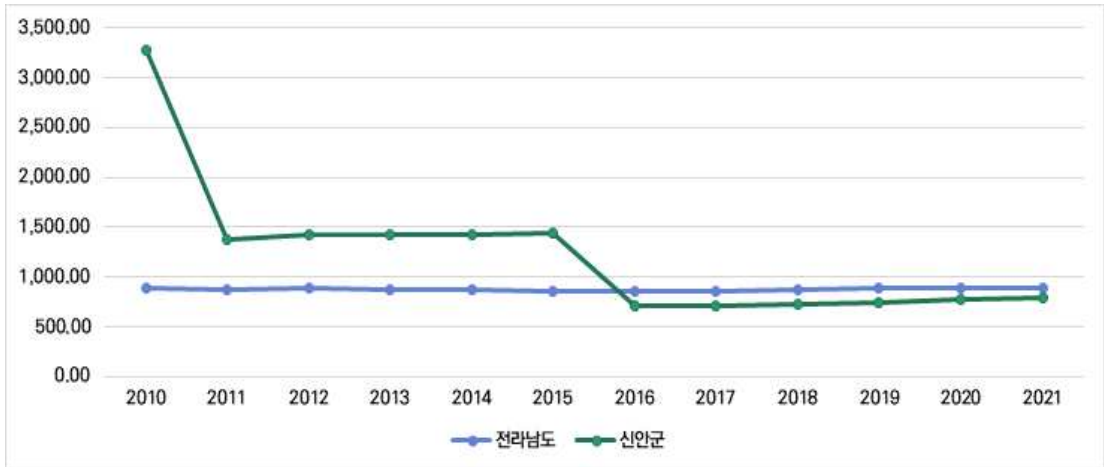


〈그림 4-15〉 해안방재림 조성 면적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사방사업실적

○ 1인당 녹지지역 면적(m²)

-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에서 토지이용상 녹지(임목지, 자연초지, 공원, 시설녹지, 하천)에 해당되는 지역을 인구 대비 면적으로 나타냄
- 신안군의 1인당 녹지면적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로는 전라남도 평균에도 못 미쳤다가 2020년과 2021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16〉 전라남도 및 신안군의 1인당 녹지면적의 변화



〈그림 4-17〉 전라남도 시군별 1인당 녹지지역 면적(m²)

- 전라남도 시군별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담양이 가장 높고, 장성, 함평 순으로 나타남
- 신안군의 1인당 녹지지역 면적(m²)은 평균 이하로 나타남. 이는 섬 지역의 특성상 녹지 지역의 증감이 어려우므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3. 사회 : SDG 1, 3, 4, 5, 10

□ SDG 1 : 빈곤종식(사회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10년간 2014년 약간 감소했다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新安군은 2016년 가장 높게 증가했다가 2023년 현재 총 2,386명으로 일반 수급자 2,255명, 시설수급자 131명임
 - 인구고령화에 따른 증가와 함께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 영역의 정책적 관심이 더욱 크게 요구됨



〈그림 4-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인원수(명)

○ 국민연금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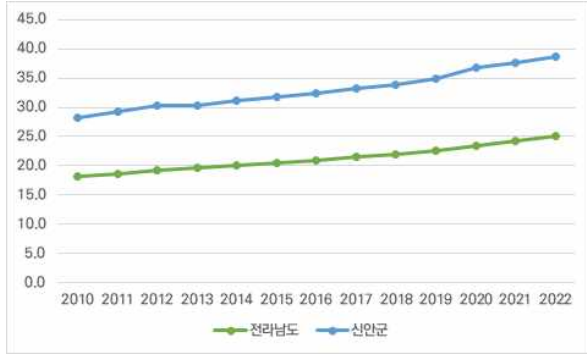
-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新安 역시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최근 나타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청년 및 중장년 인구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율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함



〈그림 4-19〉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민연금 가입자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전체 인구 감소에 비해 계속 증가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2020년 현재 27.9%에 이르는 변화를 겪고 있음



〈그림 4-20〉 고령인구 비율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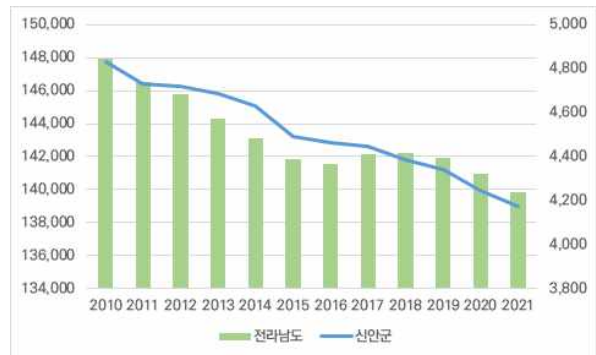


〈그림 4-21〉 고령인구 수와 구성비(%)

*출처: 국가통계포털, 고령인구 비율

○ 장애인 등록 현황

-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 세계적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장애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장애등록 제도의 '장애 판정 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에 따라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됨
 - 2021년 우리나라 신규 등록장애인 8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를 감안하면, 고령인구의 증가가 장애인 인구에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그림 4-22〉 장애인 등록 현황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등록현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다소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안군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자녀가 취학 중(대학교 포함)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함)으로 소득기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함

-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6세이며, 30대 이하 23.7%, 40대 60.7%, 50대 이상 15.7%, 평균 2.8명으로 점점 소규모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독거노인 현황

- 독거노인 현황은 2016년 이후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신안도 유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독거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 사실상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 보호나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을 영위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실제 부양에 임하지 못하는 노인을 의미함
 - 2017년과 2018년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1만 명 이상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 신안의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다시 보여줌
 - 성별로도 여성 비율이 74%로 상당히 높은 점도 복지 정책에서 유의 깊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됨



〈그림 4-24〉 독거노인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독거노인 현황

□ SDG 3 : 건강과 웰빙

○ 의료기관(병원 수)

-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수는 계속 증가했고,新安도 증가 추세이나 2020년 다소 감소한 형태를 보임



〈그림 4-25〉 의료기관(병원 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의료기관

○ 의료기관(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81개를 확보함
- 다만, 전라남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2.5병상 대비新安군은 10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확충 정책이 필요함



〈그림 4-26〉 의료기관(인구 천 명당 병상 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개)

○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안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함
 -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를 포함한 자료임
 - 2020년 현재 의사는 205명(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인데 반해, 간호사는 282명, 간호조무사는 593명으로 나타남. 간호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추진시 고려되어야 함



〈그림 4-27〉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의료기관

○ 건강보험 적용인구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신안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고, 최근 들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가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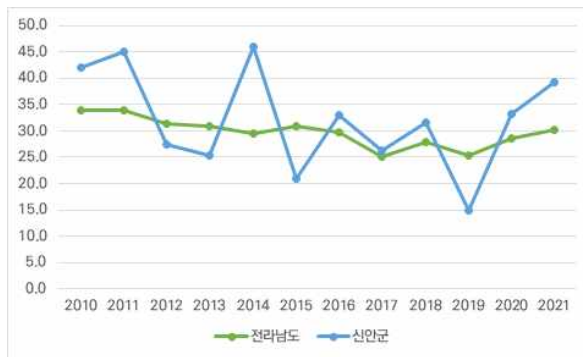


〈그림 4-28〉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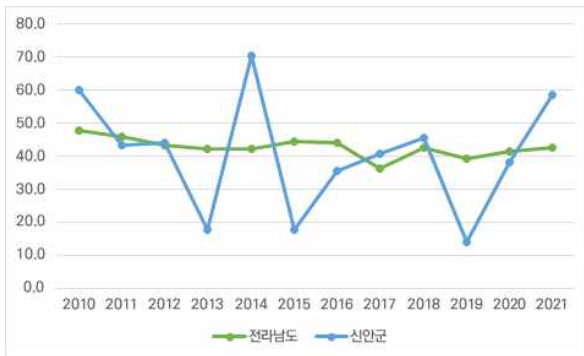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 적용인구

○ 자살률(십만 명당 자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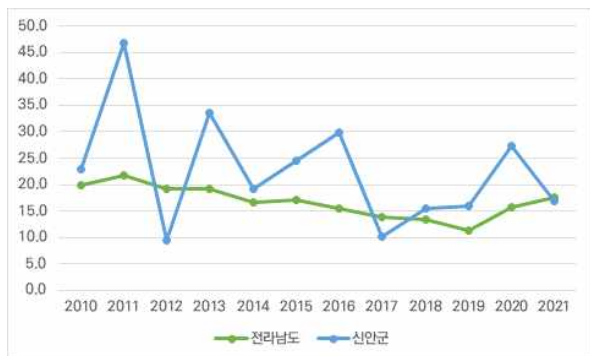
-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2011년 37.3명에서 2021년 28.5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안도 43.3명에서 30.9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 OECD가 2018~2020년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42개국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를 넘는 24.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1위를 기록함. 신안군은 우리나라 자살률보다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남성은 60.3명(2021년 기준)으로 여성보다 몇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그림 4-29〉 자살률의 전라남도 현황



〈그림 4-30〉 자살률(남성)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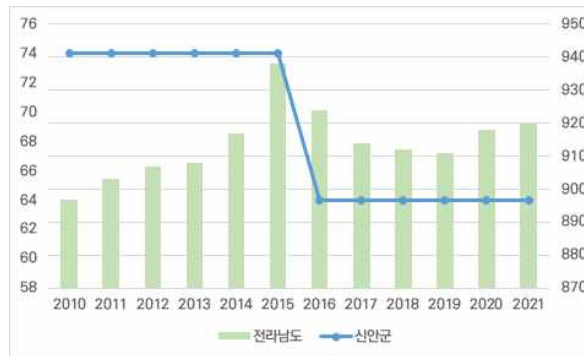
〈그림 4-31〉 자살률(여성)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자살률

□ SDG 4 : 양질의 교육

○ 학교 수

- 전라남도의 학교 수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신안군은 2016년 급감했다가 현재까지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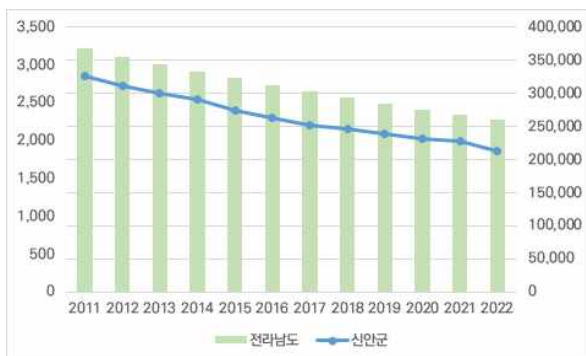


〈그림 4-32〉 학교 수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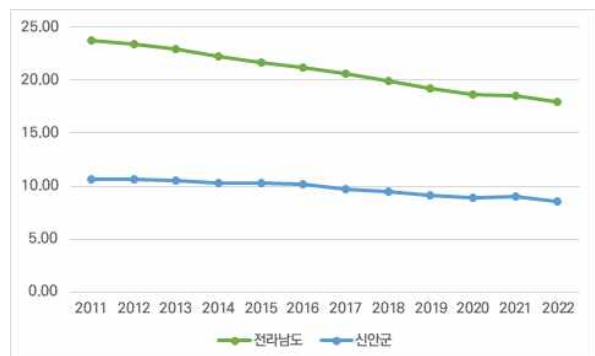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학교 총 개황

○ 학생 수(초중고등학생)

- 전라남도의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신안군도 유사하게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20,459명에서 2021년 11,325명으로 절반가량 축소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줌



〈그림 4-33〉 학급당 학생 수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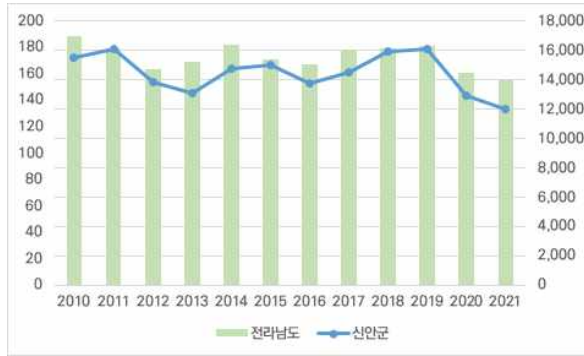


〈그림 4-34〉 학급당 학생 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교원 1인당 학생수, 재적 학생 수, 학급당 학생수

○ 적령 아동 취학(입학 상황)

-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적령 아동 취학은 지난 십여 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들어 완전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신안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직면하고 있음



〈그림 4-35〉 적령 아동 취학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기본통계, 적령 아동 취학

○ 공공 도서관과 보유 자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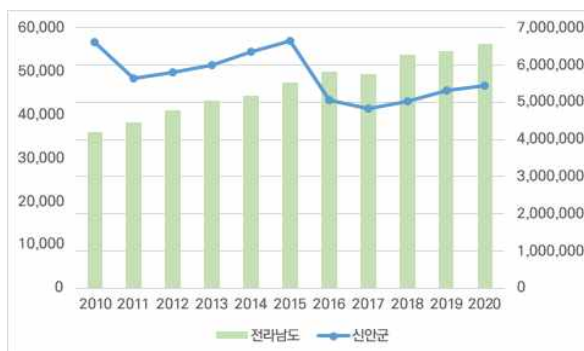
- 신안군의 공공 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2곳, 작은 도서관 10곳, 학교마을도서관 5곳이 운영 중임

소 계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마을 도서관
	군립	교육청	공립	사립	
2	2	0	6	4	5

[표 4-5] 신안군 공공도서관 현황(2022년 8월 현재)

*출처: 신안군청 홈페이지

- 공공도서관의 보유 자료는 2010년 이후 2015년에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한 후 감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보유 자료는 62,931권으로 나타남



〈그림 4-36〉 공공도서관 보유 자료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기본통계,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 수

- 공공도서관의 연간 대출권 수는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감소한 상황을 볼 수 있음
- 다만, 2018년부터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어 보유 장서 및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7〉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 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공공도서관

○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지정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4-38〉 문화재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문화재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은 전라남도과 신안군 모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삶의 질 제고를 위

해서는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가장 많은 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은 간이운동장이 60곳, 게이트볼장 16곳으로 나타났고, 신고 체육시설은 체육도장 33곳, 당구장 32곳으로 나타남
-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대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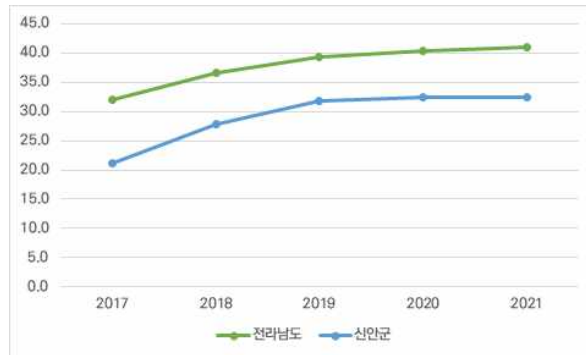
〈그림 4-39〉 체육시설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체육시설

□ SDG 5 : 성평등

○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 전라남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는 전반적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신안군도 증가로 나타남
 - 다만, 신안의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최근 32% 정도로 정체되어 있음
 - 최근 법제도에 따라 한 성이 40% 이상 넘지 못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안군은 아직 미흡한 형태를 보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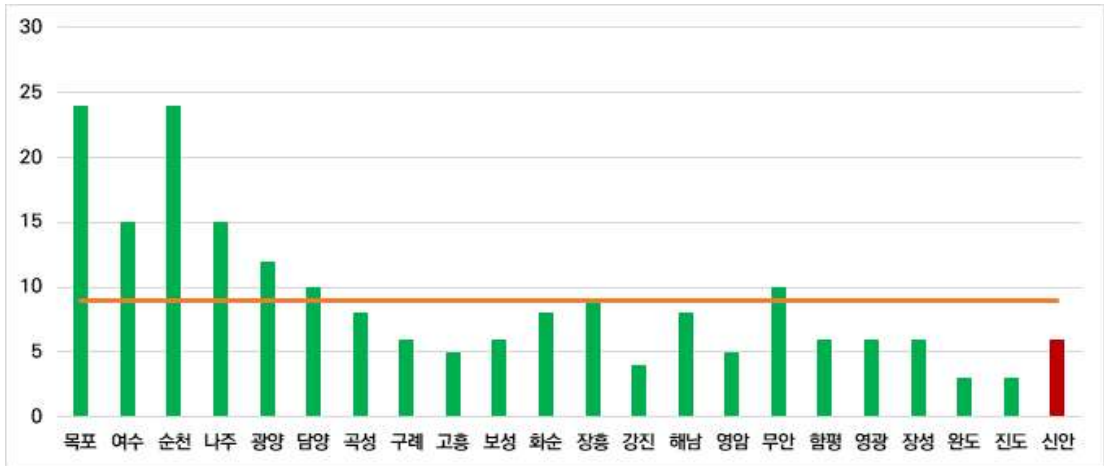
〈그림 4-40〉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출처: 국가통계포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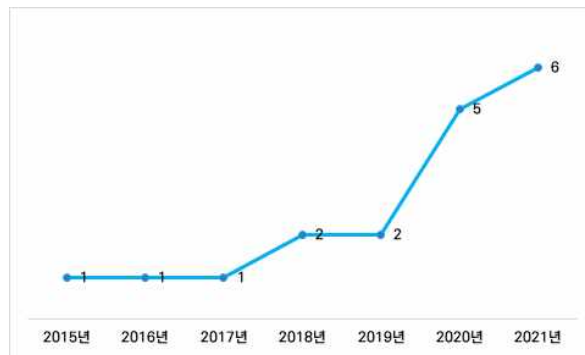
- 공직사회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채용,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의 영역에서 기회를 부여하고,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별 목표계획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17 ~’22)’에 따라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 비교 자료도 활용하고 있음
 - 여성권한척도 : 의원 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에서의 수, 실질적 GDP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의 권한의 양을 비교한 것으로 매년 UNDP가 발표
- 신안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2015년 단 1명에 불과했으나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명으로 나타남

- 전남의 시 단위 지역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군 단위는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신안군의 상황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같은 군 지역인 담양, 무안, 장흥보다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됨



〈그림 4-41〉 전라남도 시군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2021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그림 4-42〉 신안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 여성폭력 상담

- 여성폭력 상담소는 전라남도에 20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신안군에는 없음
 - 전남의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폭력 피해자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담소나 보호시설, 주거지원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전남은 여성폭력 상담소로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상담소 8개소(장애여성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가 없는 12개 시·군 관리 기능은 1366전남센터에 있으나 담당 인력이 1명뿐임
 - 9개 군(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신안)에는 여성폭력 상담소가 한 개도 없으며, 신안도 없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학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양상은 다변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추진과 대응 체계 마련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됨
-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전부개정(2019.12.11.)되었으며, 여성폭력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실태조사, 예방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됨
 - 신안에서는 관련 조례 정비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보호와 안전의 대상으로 여성폭력 사안에 접근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
 - 조례명칭은 '아동·여성 보호 조례'임. 조례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을 취약하고 의존적인 '보호' 대상으로 전제하여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함



〈그림 4-43〉 여성폭력 상담소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성평등

□ SDGs 10 :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월평균 가구 소득(%)

-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전라남도 평균보다 50만 원 미만부터 300만 원 미만까지는 낮았으나, 300만 원 이상부터 800만 원 이상까지는 높거나 유사한 형태를 보임
- 2022년新安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300만 원~400만 원」이 19.5%로 가장 많고, 「200만 원~300만 원」(17.1%), 「50만 원~100만 원」(15.5%)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수준별 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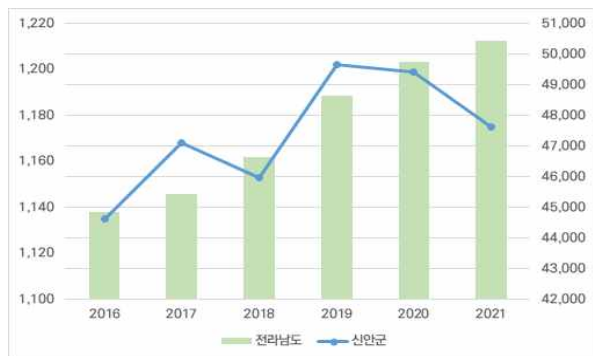


〈그림 4-44〉 월평균 가구 소득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전남 사회조사(2022),新安군 사회조사(2022)

○ 다문화가구 수

- 전라남도의 다문화가구 수는 약 4만 8천 세대이며, 이중新安군은 약 1천 1백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인구비율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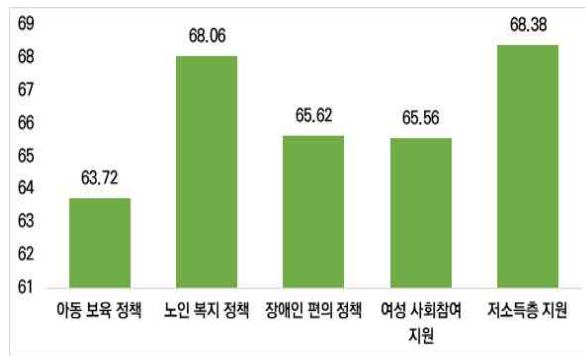


〈그림 4-45〉 다문화가구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다문화가구 현황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

- 2022년 신안군 사회조사의 복지 영역 질문을 바탕으로 아동보육 정책,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편의 정책, 여성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 정책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아동 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그림 4-46〉 신안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 결과

*출처: 신안군 사회조사(2022년)

4. 경제 : SDG 2, 7, 8,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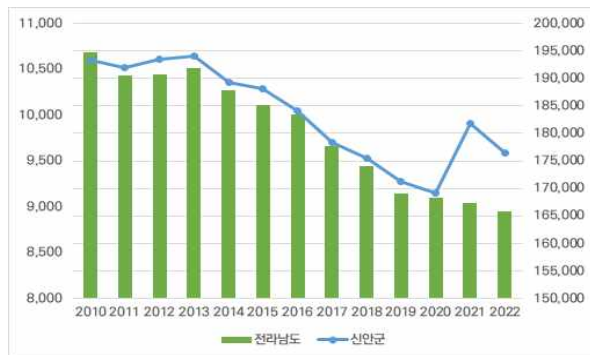
□ SDG 2 : 기아해소(식량, 농업 등)

○ 경지면적(ha)

- 경지면적은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일시 증가했다가 계속 감소 추세이며,新安군은 2015년까지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2년 17,773ha로 가장 경지면적이 넓었으나 2013년에 비해 2,809ha(13.6%) 감소함
 - 경지면적 감소는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과 유휴지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며, 신안도 유사한 요인으로 추정됨
 - 경지면적 중 53%는 논 경지면적으로, 9,592ha임. 전체 경지면적과 달리 2021년에 논 경지면적이 증가함



〈그림 4-47〉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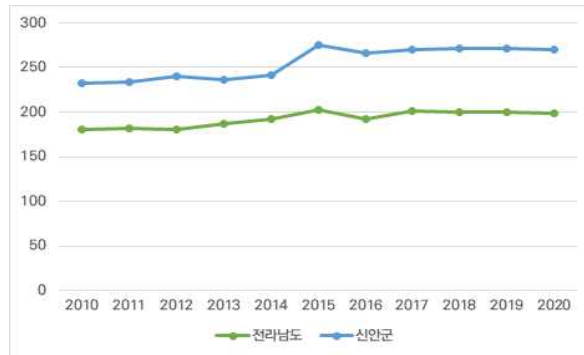


〈그림 4-48〉 논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농업면적조사-경지면적

○ 가구당 경지면적(a)

- 가구당 경지면적을 보면, 전라남도 전체(199ha)보다 신안(270ha)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신안군이 농업 비중이 전라남도 전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가구당 경지면적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가수의 감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경지면적은 2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4-49〉 가구당 경지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지면적

○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 식량작물 생산량을 정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안군은 전라남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함
 - 신안군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466(M/T)으로 미곡 42,430(M/T), 맥류 3,219(M/T), 두류 1,387(M/T)으로 조사됨



〈그림 4-50〉 식량작물 생산량의 전라남도 현황(M/T)

*출처: 국가통계포털, 식량작물 생산량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는 전라남도에서 2014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신안군의 2020년 친환경 농가 수는 1,996호로 2010년 대비 41%로 감소했고, 전라남도는 9만 7천 호(2010년)에서 2020년 2만 7천 호로 71%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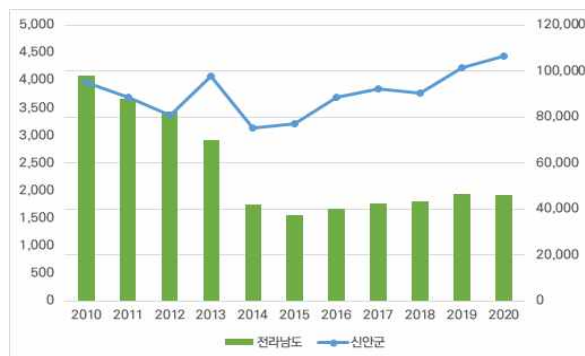


〈그림 4-51〉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현황

○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ha)

- 신안군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4,437ha로 증가함.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안군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함
- 2020년 신안군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2.9%로 2016년 18.4%에서 4.5%p 증가함



〈그림 4-52〉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

○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 신안군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2011년, 2013년 15만 톤을 보이다가, 2014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12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新安군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은 2020년 15,876톤 중 농산물 12,446톤, 축산물 3,429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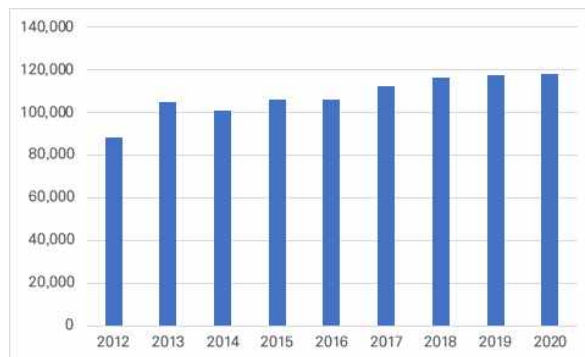
〈그림 4-53〉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 SDG 7 : 친환경 에너지

○ 전력사용량(MWh)

- 신안군의 전력사용량은 완만한 증가 추세로 2020년 118,109MWh를 기록함.
 - 전체 전력의 42.6%인 50,272MWh는 서비스업에서, 농림수산업에서 31.9%인 37,686MWh, 가정용 16.6%, 공공용 6.3%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신안군의 건물에너지사용량은 9,407TOE로 무안군(15,290TOE)에 비해 낮은 건물에너지사용량을 보임
 - 효율적인 전력 사용으로 지역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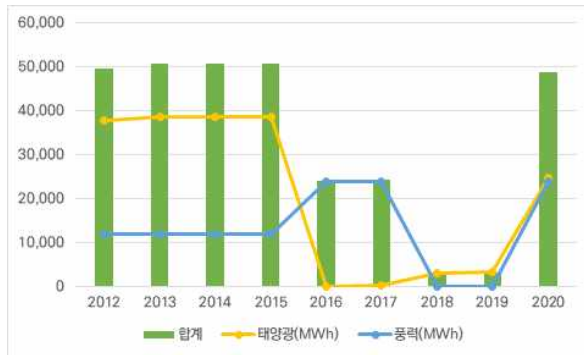


〈그림 4-54〉 신안군 전력사용량

*출처: 국가통계포털, 신안군기본통계, 용도별 전력사용량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평균적으로 5만MWh 수준을 발전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19.10)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2020년 신안군은 안좌면, 도초면, 지도읍, 압해읍에서 24,711MWh의 태양광 발전량을 기록함. 또 자은면의 풍력발전은 24,000MWh임
 - ‘에너지전환포럼’이 2020년 전력자립률을 100% 달성한 지자체 4곳은 발표한 바 있음. 경북 영양군 509%, 전북 진안군 127%, 강원 화천군 102%이며, 이외에도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이 99.8%로 사실상 RE100에 준하는 성과를 달성했음



〈그림 4-55〉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출처: 국가통계포털,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생산량(고유단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 신안군의 태양광발전소는 18개소로 1,407.5MW 용량을, 풍력발전소는 16개소(육상 5개소, 해상 11개소)로 2,699MW 용량임
- 태양광발전사업(3MW초과,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명	위 치	용 량 (MW)	허가일	비고
계	18개소	1,407.5		
장산태양광	장산면 오음리 일원	3	'07.03.20.	가동
대호에너지 신안태양광	팔금면 읍리 일원	3	'07.08.29.	가동
동양에너지(주)	지도읍 태천리 일원	22.5	'08.07.20.	가동
(주)금산태양광	안좌면 금산리 258-3 일원	9	'11.10.26.	가동
포스코에너지 신안파워	팔금면 원산리 일원	14.5	'11.09.30.	가동
(주)대척태양광	안좌면 대척리 1-3 일원	7.5	'12.01.30.	가동
안좌스마트팜	안좌면 내호리 일원	96	'17.11.29.	가동
신안태양광	지도읍 일원	150	'18.02.22.	가동
빛과소금태양광발전소	증도면 대초리	100	'18.10.31.	
신안임자태양광	임자면 대기리	91	'18.05.01.	
신안자라태양광발전소	안좌면 자라리 일원	22	'19.03.18.	가동
신안그린솔라발전1단지	신의면 일원	160	'19.05.27.	
안좌스마트팜	안좌면 내호리 일원	204	'19.10.30.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비금면 덕산리 일원	200	'20.01.20.	

발전소명	위 치	용 량 (MW)	허가일	비고
신안비금태양광	비금면 덕산리 일원	100	'20.01.20.	
케이에스피태양광발전소	안좌면 한운리 일원	15	'20.02.25.	
신의태양광	신의면 일원	110	'20.09.22.	
그린테크시티(주)	안좌면 내호리 일원	100	'21.02.02.	

▪ 풍력발전사업(3MW초과,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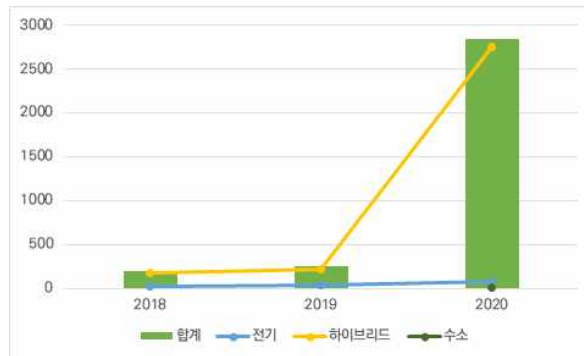
발전소명 (사업자)	위 치	용 량 (MW)	허가일	비고
계	16개소	2,699		
비금풍력발전	비금면 구림리	60	'13.05.31.	육상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자은면 고장리 산266 외10필지	39	'13.01.28.	육상
제이에스파워	하의면 후광3리 산50번지 일원	32	'18.03.29.	육상
지에스이피에스	장산면 마진도리 102, 팽진리 193 일원	30	'16.11.28.	육상
신안그린에너지	자은면 백산리 271, 고장리 산224-13 일원	63	'15.05.20.	육상
압해풍력발전소	압해읍 가룡리 인접 공유수면	80	'15.03.31.	해상
원원드파워	증도면 우전리 인접 공유수면	33	'16.05.31.	해상
전남해상풍력	자은면 북동쪽 해상 공유수면	99	'17.09.22.	해상
전남2해상풍력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 해상	399	'21.02.02.	해상
전남3해상풍력	자은도 서쪽 공유수면 해상	399	'21.02.02.	해상
전남신안해상풍력	자은면 서측 공유수면 해상	300	'17.09.29.	해상
신안우이해상풍력	도초면 우이도리 남동측 해상	367	'19.05.27.	해상
신안어의해상풍력	지도읍 어의리 인접 공유수면	99	'19.05.27.	해상
천사어의풍력발전	지도읍 어의리 어의도 북동측 공유수면	99	'20.04.27	해상
신안대광해상풍력	임자면 북서쪽 공유수면	400	'21.02.02	해상
임자해상풍력	임자면 남서측 해상 일원	200	'21.06.29	해상

○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까지 255대에서 2020년

2,833대로 1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함

- 신안군의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차는 2019년 대비 2배 가량 (37대→76대) 증가했고,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2배 이상 (218대→2,756대) 증가했음
- 등록된 자동차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 주차, 도로 부문에서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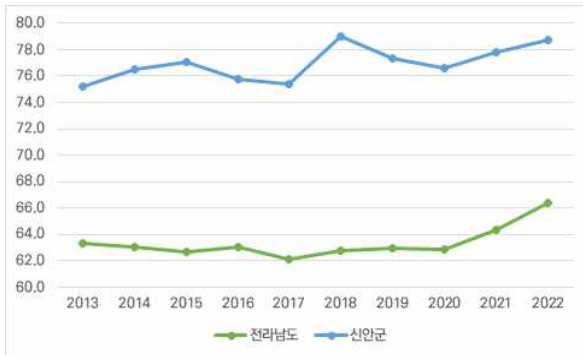
〈그림 4-56〉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출처: 국가통계포털, 읍면별 자동차 연료 종류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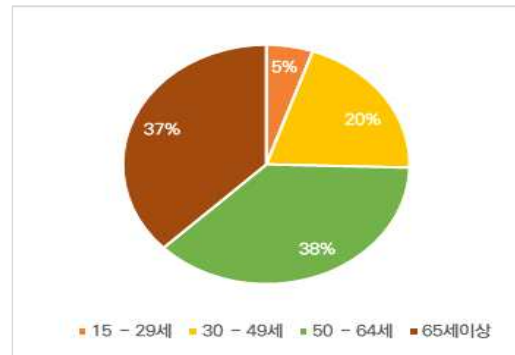
□ SDG 8 : 양질의 일자리

○ 고용률(%)

- 신안군의 고용률은 2018년 7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임
 - 신안군의 고용률은 전라남도 평균 고용률인 66.4%(2022년)에 비해 높은 78.7%로 나타냄. 전라남도 내의 진도군은 75.4%, 완도군 67.7%, 무안군 62.4%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22년 취업자 수는 약 2만 3천 명으로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이 각각 38%, 37%로 높게 나타남



〈그림 4-57〉 고용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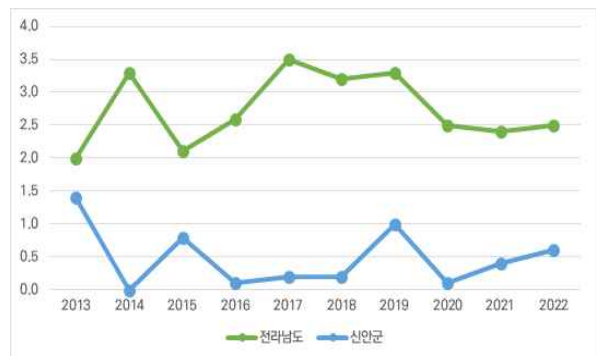


〈그림 4-58〉 취업자 연령별 분포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총괄, 고용률

○ 실업률(%)

- 실업률은 전라남도 평균인 2% 보다 훨씬 낮은 0.0-0.6% 수준을 기록함
 - 신안군의 실업률은 2013년 1.4%로 가장 높았고, 2014년 0.0%로 가장 낮았음. 2015년, 2019년 각각 0.8%, 1.0%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짐
 - 신안군의 실업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농림어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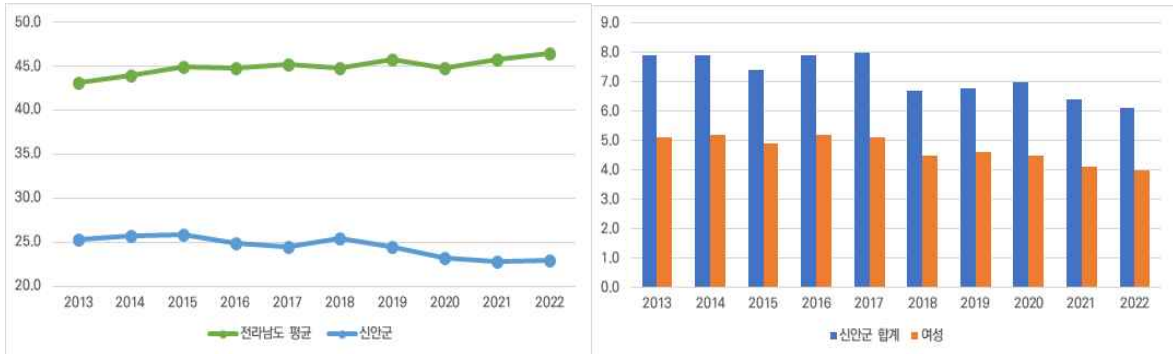


〈그림 4-59〉 실업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총괄,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천 명)

- 경제활동인구는 전라남도 시·군 평균인 4만 5천 명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2만 3천 명임
 - 전라남도 평균은 4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증가 추세임. 반면, 신안군의 경제활동인구는 22년 2만 3천 명 규모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2013년 약 8천 명에서 2022년 약 6천 명으로 감소함. 그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4천 명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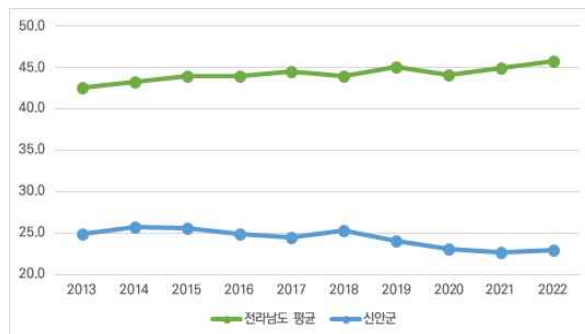


〈그림 4-60〉 경제활동인구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그림 4-61〉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천 명)

- 취업자 수는 전라남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신안군의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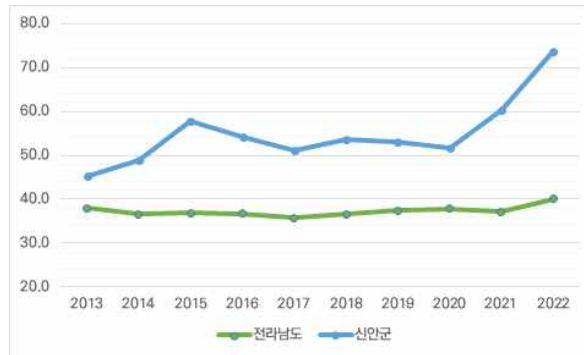


〈그림 4-62〉 취업자 수의 전라남도 시군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취업자 수

○ 청년고용률(%)

- 신안군의 청년고용률은 전라남도 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 특히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73.8%에 이룸
- 전라남도의 청년고용률이 40%대에 정체되어 있으나 신안군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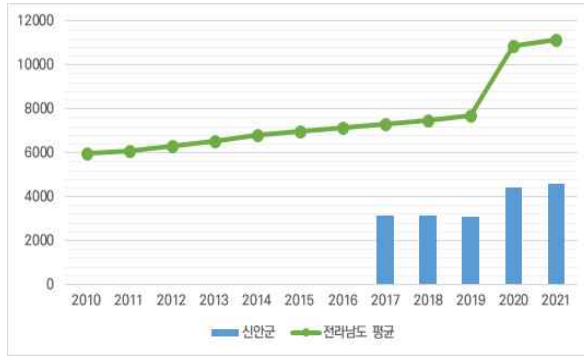
〈그림 4-63〉 청년고용률의 전라남도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청년고용률

□ SDG 9 : 산업혁신

○ 사업체 수

- 사업체 수는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았으며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신안군의 2021년 4,583개 사업체 수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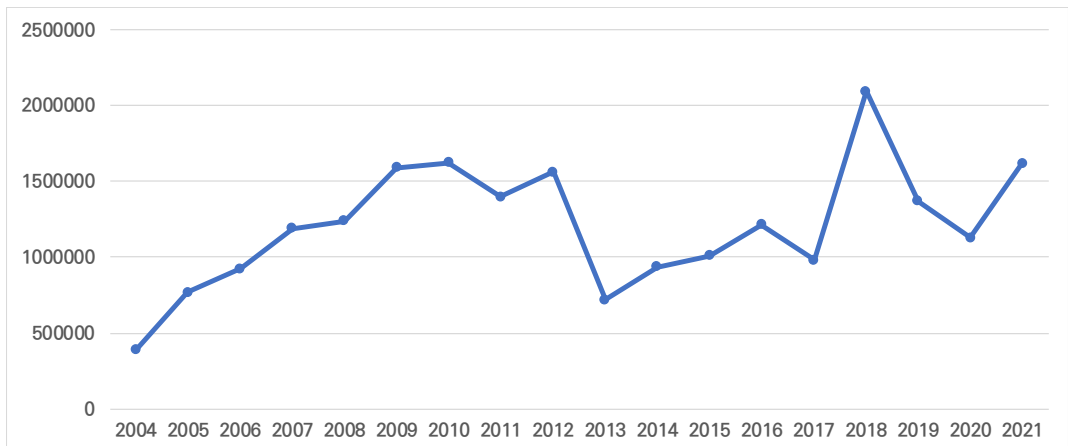


〈그림 4-64〉 사업체 수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사업체 총괄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 신안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는 2022년 1백 62만여 명 수준임.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2백만 명을 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임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해당 관광지의 방문객 수 집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임
 - 주요 관광지점은 퍼플교(33만 명), 무한의 다리(19만 명), 천사섬분재공원(15만 명), 비금도(13만 명), 암태(11만 명), 흑산도(10만 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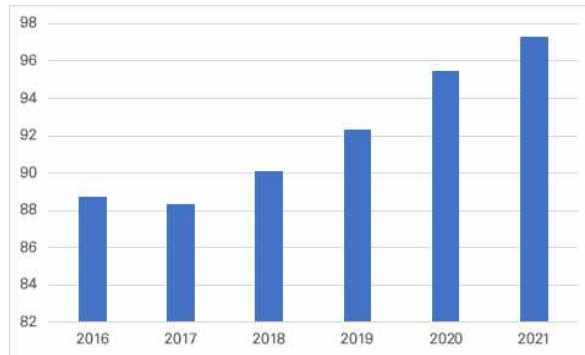
〈그림 4-65〉 신안군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현황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

□ SDG 11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1인당 도시지역 면적(m²)

- 신안군은 전체 면적 중 0.33%(3,725,281m²)만이 도시지역임. 전국 시군구 도시지역 비율 중 가장 낮은 비율임
- ‘도시지역면적’은 행정구역 기준으로 동·읍에 해당하며, 용도 구역 기준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합한 면적을 뜻함. 신안군의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2016년부터 증가하여 2021년에는 97.29m²로 나타남
 - 신안군의 도시면적은 2019년부터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4,430명(2019년)에서 4,204명(2021년)으로 감소하면서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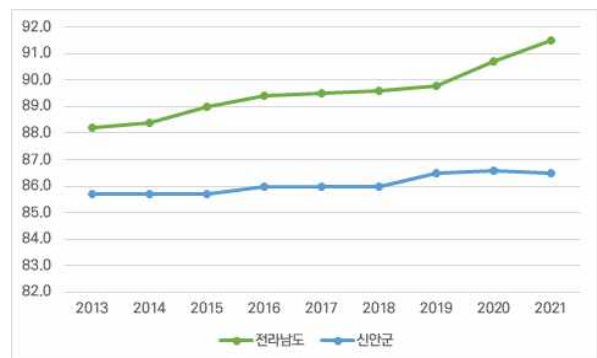


〈그림 4-66〉 신안군 1인당 도시면적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1인당 도시지역 면적

○ 도로포장률(%)

- 도로포장률(%)=(포장도로÷전체 개통도)×100임
- 신안군의 전체개통도 380,210m 중 86.5%인 328,760m가 포장된 도로임. 전라남도의 91.5%에 비해 낮은 수준임. 전라남도 평균 도로포장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신안군은 정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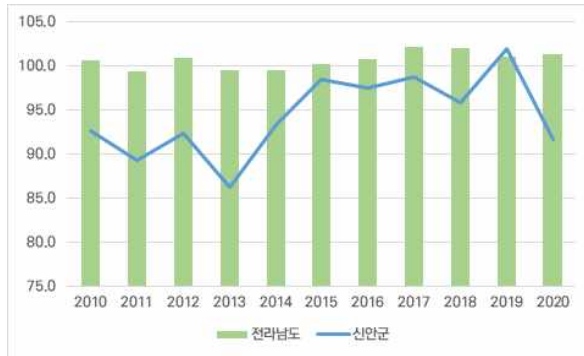


〈그림 4-67〉 도로포장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도로포장률

○ 주택보급률(%)

- 신안군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102%로 높아졌다가 2020년 91.7%로 떨어짐. 전라남도 평균은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거의 일정한 반면, 신안군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2019년을 제외하고 100%에 이르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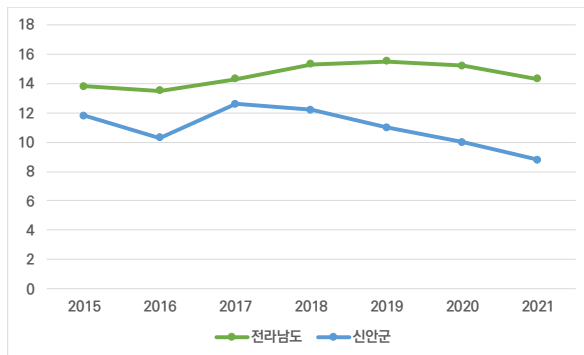
〈그림 4-68〉 주택보급률의 전라남도 평균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기본통계, 주택 현황 및 보급률

- 2020년 기준 전체 16,705채의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1,622채로 약 70%를 차지함. 전라남도 평균 노후주택 비율인 35.6%의 두 배 수준으로 주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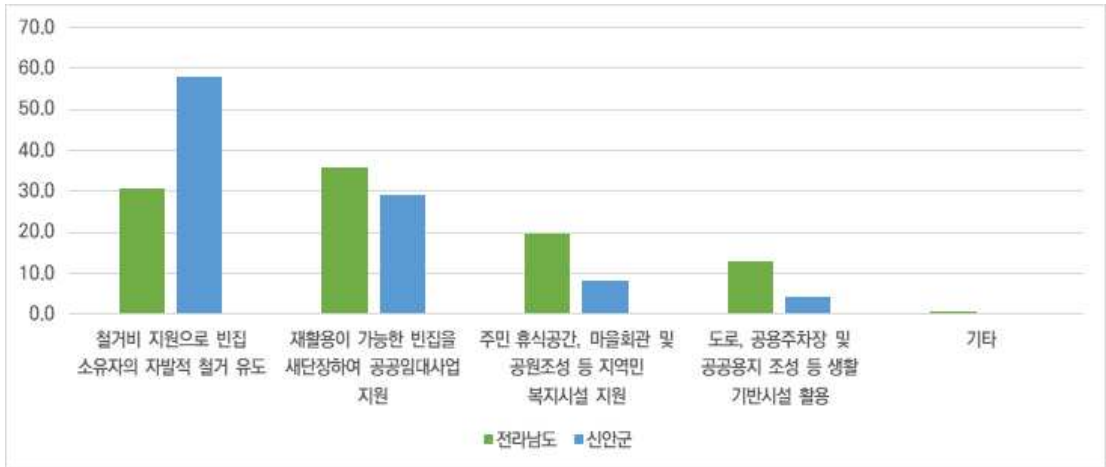
○ 빈집비율(%)

- 신안군의 빈집비율은 2017년 12.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몇 년도에는 8.8%로 떨어짐. 전라남도 평균 빈집비율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임
- 신안군 전체 주택 16,578채 중 빈집은 1,452채임



〈그림 4-69〉 빈집비율 전라남도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빈집비율



〈그림 4-70〉 빈집 활용 방안 비교

*출처: 전라남도사회조사(2022), 빈집 활용 방안

- 신안군이 빈집 활용 방안으로 추진하는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정책에 대해 과반수 주민이 지지하고 있음

○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mu\text{g}/\text{m}^3$)

- 신안군의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인근 지역인 무안군보다 약간 낮았고, 진도군과는 유사하거나 약간 높음.



〈그림 4-71〉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의 전국 비교

5. 법제도와 협치 : SDG 16, 17

□ SDG 16 : 평화, 인권, 안전, 법제도

○ 예산 결산 총괄

-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新安군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新安군은 2019년 기준 884,549 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 총액은 17% 증가함



〈그림 4-72〉 예산 결산 총괄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예산결산 총괄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총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재정자립도(%)는 $\langle \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text{일반회계} \rangle \times 100$ 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최종 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 개편 후 기준으로 작성됨
 -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가장 낮아졌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新安군은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2014년 4.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후 2020년 6.6%로 완만하게 증가함. 2020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낮은 6.3%(보성군, 완도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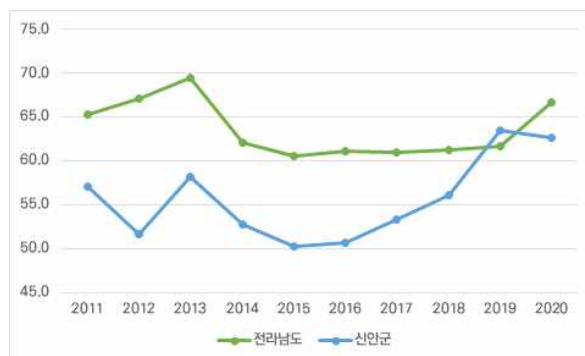


〈그림 4-73〉 재정자립도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는 자주자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으로 계산하며, 최종 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 개편 후 기준으로 작성함
 - 신안군의 재정자립도와 달리 재정자주도는 2019년 전라남도를 초월함. 2020년에는 전라남도 66.7%, 신안군 62.6%로 전라남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아짐



〈그림 4-74〉 재정자주도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재정자주도

○ 범죄 발생 및 검거

- ‘신안경찰서’가 설치되지 않아 신안군만의 범죄 발생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전국적으로 경찰서가 없는 자치단체는 단 3곳으로 신안군(3만 9천 명), 강원도 양양군

(2만 7천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2만 1천 명)으로 조사됨

- 다만, 신안군에는 파출소 15곳, 치안센터 20곳이 있고 경찰관 9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 신안군은 현재 목포경찰서 관할 지역임



〈그림 4-75〉 범죄 발생 건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범죄 발생 및 검거

○ 화재 발생

- 화재 발생 건수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신안군도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신안군의 화재 건수는 2010년 39건으로 가장 낮았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화재 예방에 관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4-76〉 화재 발생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화재 발생

○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피해 건수, 피해 현황)

- 신안소방서가 2022년에 신규 설치됨에 따라 신안군만의 재난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건수는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기타 등 풍수해를 제외한 재난에 관한 통계로 20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그림 4-77〉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액(백만 원)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 풍수해 발생(피해액)

- 풍수해 피해액은 2011년과 2012년 크게 나타났고, 특히 2011~2012년 신안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태풍 메아리에 의한 다시마, 툇 등 양식 수산물 및 양식시설 피해가 발생함. 2011년 가장 큰 풍수해 피해인 3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
 - 2011년에 이어 2012년은 230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가 있으나, 2013년부터는 풍수해 발생 피해액 규모는 급감함.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은 변칙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예방 대책의 강구와 함께 회복력을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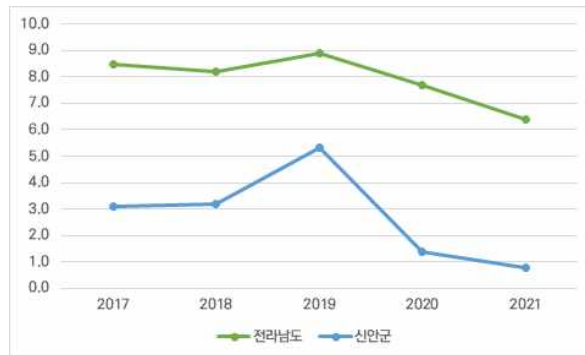


〈그림 4-78〉 풍수해 발생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풍수해 발생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신안군의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1년 0.8건으로, 전라남도의 6.4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text{교통사고발생건수} \div \text{자동차등록대수} \times 1,000$ 임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92건, 2021년 86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년까지 2만대 수준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6만6천 대, 2021년 10만 대로 증가하면서 지표값은 하락함.
 - 경제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79〉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전라남도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지역안전지수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음.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임.
- 해당연도 안전등급은 전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함. 신안군은 2021년까지 범죄분야에서 연속해서 1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2등급으로 하향함
- 신안군의 지속안전지수 등급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특히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모두 4등급, 생활안전 분야에서 3등급, 범죄 분야에서 2등급임

2022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전라남도	5	5	2	4	3	4
신안군	4	4	2	3	4	4
2021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전라남도	5	4	3	4	3	4
신안군	4	4	1	2	4	4
2020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전라남도	5	5	2	3	2	5
신안군	2	4	1	2	1	4
2019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전라남도	3	4	2	2	3	3
신안군	4	2	1	1	3	3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 SDG 17 : 협치

○ 공무원 총괄

- 공무원 수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 2020년에는 감소하였음.
 - 신안군은 700명 수준의 공무원 수를 유지하다가 일시적으로 2017년 466명으로 감소하였음. 2018년 777명, 2019년 795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다시 545명으로 감소함
 - 전라남도는 전체 공무원 수는 2만 5천 명 수준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등록인구/공무원 수)가 90명 수준인 것에 반해 신안군은 60명 수준임



〈그림 4-80〉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그림 4-81〉 공무원 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공무원 현황

○ 민원서류 처리 건수

- 전라남도의 민원서류 처리 건수는 2011년 가장 낮았다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신안군은 2019년 95,38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신안군의 민원서류 처리 건수 중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확인증명·교부’ 분야이고, ‘신고·등록’이 11%, ‘인가·허가’가 5%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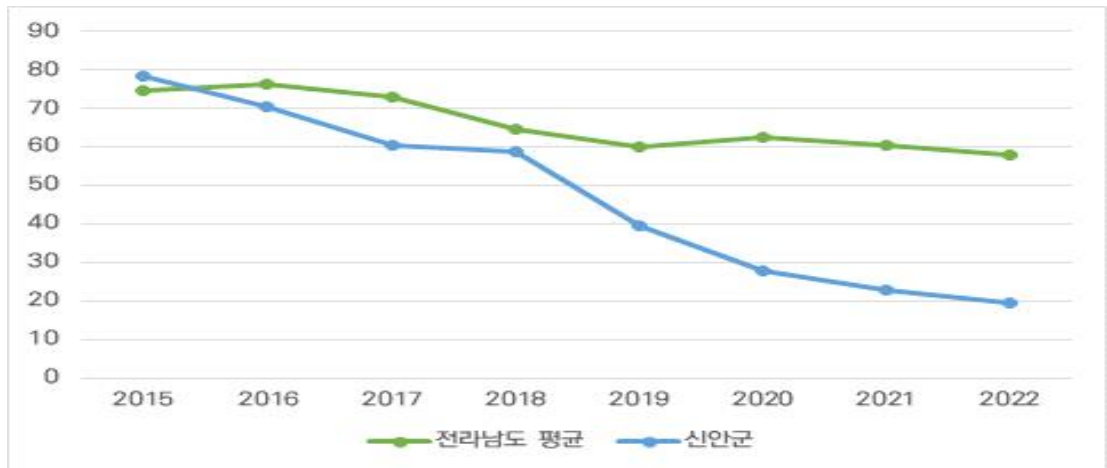


〈그림 4-82〉 민원서류 처리 건수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국가통계포털, 민원서류 처리 현황

○ 정보공개율(%)

- 전라남도의 정보공개율은 평균 70%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57.8%(2022년 기준)으로 나타남. 신안군은 전라남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4%으로 나타남
- 신안의 정보공개율이 78.1%에 이르던 2015년에는 등록된 정보가 5,663건이었고, 그 중 4,423건이 공개되었으나, 2022년에는 5,563건 중 단 1,079건만 공개되어 19.4%로 정보공개율이 급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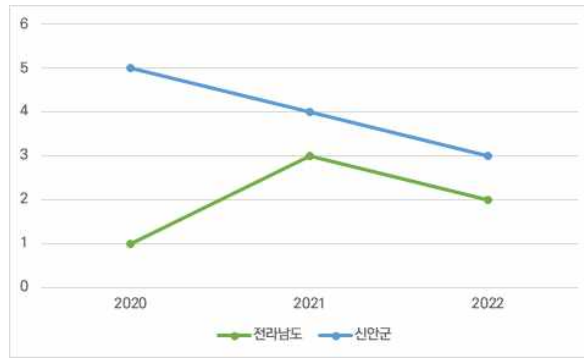


〈그림 4-83〉 정보공개율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정보공개포털

○ 종합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지표를 매년 제시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1등급이 가장 높고 수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 신안군은 2020년 5등급으로 전라남도 1등급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준임. 그러나 2021년, 2022년 매년 등급을 한 단계씩 높이고 있음
 - 신안군은 2022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73.6점)을 받았는데 외부체감도에서는 90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85.1점) 대비 4.9점 높았으며, 내부체감도는 59.6점으로 전국 군 평균(58.6점) 대비 1.0점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기초자치단체 평균 76.6점에 미치지 못하는 신안군의 종합청렴도를 고려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등 다양한 청렴 정책 추진을 해야 함



〈그림 4-84〉 종합정령도의 전라남도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예산액(백만 원)

- 신안군의 주민참여 예산은 2018년 132억 원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22년 기준 32.1억 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음
 -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2017년~ 2019년에는 예산 사업별 3천 4백만 원 수준의 사업 규모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수준이 되었음. 지원하는 사업 수(건)는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164건으로 나타남



〈그림 4-85〉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현황
*출처: 신안군

6.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평가에 대한 이야기

“서울에서 교통 상 제일 먼 지역, 도시화 면적 0.33%로 전국 최하위…”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의 기회로 삼다

전라남도 최남단의 신안군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에서 교통 상 거리감이 제일 먼 지역이다. 많은 섬으로 구성된 1004섬, 신안군은 육지면적 655.6km² 중 0.33%만 도시화되었다. 이는 전국 시군구 도시화 비율 중 제일 낮다.

제일 멀고, 제일 발전되지 않은 ‘신안군’은 가장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신안군의 바다의 면적은 12,654km²로 서울특별시의 22배에 달하고, 그 바다 중 8%의 갯벌 습지는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21.7.26. 등재)’으로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천연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장도 람사르 습지, 증도 람사르습지, 다도해상국립공원, 신안갯벌도립공원 등 천연자원을 지닌 신안군은 그 빼어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연정화법을 활용한 마을하수처리장 확대, 갯벌·하천 보호를 위한 유용 미생물(EM) 보급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람이 돈이 되고, 햇빛이 돈이 됩니다.” 전국 최초 햇빛 연금 도입

기후위기의 시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신안군은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1,407.5(MW), 풍력 발전 2,699(MW) 용량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정책을 실현하였다. 안좌면, 지도읍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개소하고, 2022년에는 11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햇빛 연금’으로 공유하였다.

“섬 네트워크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




2022년 신안군은 “제1회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1004섬이라 불리는 신안군

은 1,025개 섬(유인도 73, 무인도 952)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섬 문화가 존재한다. 개별 섬의 교통편은 대개 육지로 향해있고, 섬 간의 소통과 교류는 미비하다. <자산어보>의 ‘정약전 바다학교’ 도입, 그림책으로 섬을 그려낸 ‘그림책아일랜드’, ‘행복전남 문화지소’ 등 다양한 섬 지역 문화를 엮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처하는 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블루 카본(blue carbon)을 저장할 수 있는 바다 정원화 사업, 그린 카본(green carbon)을 위한 마을숲 확대 등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 자동차 지원, 아열대 작물 등 신소득작물 발굴 및 육성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한 눈에 보는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평가

- 지표의 추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
 -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검토
 -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에 따라 지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선되는 추세인지, 악화하는 추세인지를 판단
- 지표에 대해 신호등 형상을 활용해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함
 - 평가 지표의 종합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제시
 - 다만, 일부 평가 지표의 경우 전남의 타 시군과 비교 또는 전국적인 평균에 못 미치거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추세는 상향이어도 다소 낮게 판정함







구분	양호	보통	미흡
표현			
특징	추세 향상	정체상태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









[표 4-6]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평가 기준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평가와 진단

- 환경, 사회, 경제, 법제도/협치로 구분해 각 영역과 연계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평가 시도
- 긍정과 부정의 영역으로 구분해 개선이 필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요약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기술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평가결과	분석 결과의 요약
환경	6 (물과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보급률은 90% 안팎을 보이지만, 폭염,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 확보와 물 재이용 정책이 더욱 중요해짐 •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2021년 현재 94.8%, 전남은 82.8%에 이르지만 신안군은 섬 지역의 특성 때문에 41%에 불과함. 하수 정책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섬의 하수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까지 4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60만 톤 수준으로 급증함.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까지 1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1.7kg까지 급격하게 증가 • 다만,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며, 2019년부터 크게 상승함 • 지속적인 폐기물 감소 정책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13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라남도 타 지역과 비교해 높지 않으나 군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 2020년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모두 수송 부문에서 발생했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영향을 미쳤음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적극 고려해 결정해 탄소중립 섬을 향한 방향도 고려되어야 함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평가결과	분석 결과의 요약
	14 (해양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생태자연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15 (육상생태계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 면적은 전남의 평균 56%보다 낮은 50% 수준인 것은 섬 지역의 한계로 보임 1인당 녹지지역 면적도 전남 평균에 못 미치지만, 특색있는 녹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사회	1 (빈곤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인구 고령화가 미친 영향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증가추세이고, 독거노인은 크게 증가해 복지분야의 정책 대응이 요구됨
	3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이나 최근 정체에 접어들었고,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전남 22.5개에 비해 신안군은 10개로 개선이 요구됨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한 것은 인구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남성 자살자 수가 급격히 늘어 개선이 요구됨
	4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수는 2011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적령 아동 취약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공공 도서관 보유 자료는 6만 2천여 권이나 도서관의 연간 대출권 수는 4천여권에 불과해 개선이 요구됨
	5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32%로 전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도 전남 평균에 못 미쳐 개선이 요구됨 여성폭력 상담소가 없어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 제도 역시 일부 정비가 요구됨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평가결과	분석 결과의 요약
	10 (불평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남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저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인구 비율 대비 다문화가구 수도 높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에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개선이 요구됨
경제	2 (기아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면적은 지속적 감소했으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및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은 증가함 친환경 먹거리(천일염, 농축산물, 수산물) 생산 거점 역할을 함
	7 (친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다소 낮고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 추세임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증가로 전력자립률 100% 달성함
	8 (양질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은 높고 증가 추세이며, 실업률은 낮고 감소 추세임 다만, 경제활동인구, 상용직 인구, 취업자 수, 청년 고용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9 (산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 수는 증가 추세이고, 관광지점 다각화로 관광객 수 증가로 나타남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보급률은 적절한 상태이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0%를 차지해 개선 필요함 빈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남
	법제도/ 협치	16 (인권, 정의, 안전, 법제도)	
17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나 최근에는 다소 감소함 정보공개율은 감소 추세이며 타 도시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매년 등급 개선을 통한 투명한 행정이 요구됨

[표 4-7] 신안군 지속가능성 기초현황 분석의 주요 내용

7. 신안군 민선 8기 공약 사업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

■ 신안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현황

□ 민선 8기 공약 사업 분야별 현황: 5대 분야 51개 사업

-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 조성 : 5개 사업
- 친환경 고소득 전략사업 집중 육성 : 14개 사업
-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중심지 1004섬 신안 : 10개 사업
- 균등한 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의 메카 신안 : 13개 사업
- 맞춤형 교통복지로 편리한 신안 : 9개 사업

□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 조성(5)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
1-1	섬에 세계적인 작가 뮤지엄 4개 이상 조성	안좌/ 비금/ 도초 외 1개소	11
1-2	1읍면 1뮤지엄 조성	11개소 준공	11
1-4-1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유치 개최	행사 개최 9회	11
1-4-2	뮤지엄별 연1회 이상 특별전 유치개최	특별전 개최 10회	11
1-4-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시설로 활용	지역주민교육실시 10회	4, 11

□ 친환경 고소득 전략산업 집중 육성(14)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s
2-1-1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참여 30% 의무화	조례 개정	1, 7, 11
2-1-2	태양광 주민이익공유 확대(주민수혜 20% → 40%)	태양광 이익 배당금 주민수혜율(%)	7, 1
2-1-3	해상풍력사업의 조기착공(0%→20%)	상생협의회 구성, 개별법 인허가 추진 4개 단지	7
2-2-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증설	신축 1, 배양기 설치 8기	2, 3
2-2-2	농작업용 편의장비 보급(수확기, 비닐하우스, 파종기 등)	다목적하우스 180동, 농작업편의의자 7000개, 고추운반수확차 180개	2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s
2-2-3	벼농사의 규모화 및 밭농사의 기계화 지원	영농대행 추진면적 100ha, 밭작물 농기계 임대 120대, 밭작물 농자재 공급 240ha	2
2-2-4	대규모장비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대규모장비 구입 70대	2
2-4-1	김, 왕새우, 개체굴 학교 개설, 전문인력 지속적인 양성	1004굴 양식학교 수료 200명	8, 14
2-4-2	양식허가 지원 및 시설비 용자제도 지원	용자 집행 실적률	9, 14
2-4-3	수산양식 1대1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집행 실적률	9, 14
2-4-4	천일염 품질 등급제 도입, 3년 이상 급천일염의 보증제 도입	천일염 품질등급제 및 보증제 실시	2, 14
2-4-5	천일염 생산시설의 기계화, 현대화사업지원	천일염 무인자동화 장비 100대	9, 14
2-4-6	아열대작물 재배 확대(바나나, 커피, 망고 등)	재배면적 확대 총 13ha	2, 13
2-4-7	청년 임대어선제도 확대(11척→40척)	임대어선(누적) 40척	8, 14

□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중심지 1004섬 신안(10)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s
4-1-1	1읍면 1특성화 공원 사업 추진(읍면당 3~5만 평 이상)	1섬 1대표 정원 조성 4개소 1섬 1대표 꽃축제 개최 11회	11, 15
4-1-2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테마섬 조성(20개 조성)	테마섬 조성 20개소	11, 15
4-1-3	사계절 꽃 축제 개발(6개→12개) ⇒ 수국, 원추리, 애기동백, 수선화, 맨드라미, 튤립 등	꽃 축제 개발 12개	11, 15
4-1-4	1004섬 경관 조성을 위한 꽃과 나무의 관내 생산 보급	초화 및 나무 생산 공급 900만 본 육묘장 확대 조성 5개소	15
4-1-5	갯벌모실길 1004Km 단계적(2026) 조성	공사 완료	12, 14
4-2-1	다도해 섬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활용	실시 설계 및 건립 완료	12, 14
4-2-2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설계 및 건립 완료	14
4-2-3	친환경세제 확대 보급	유용미생물 보급량 200톤, 유용미생물 보급마을 14개, 주민설명회 및 참여활동 14회	3, 12,
4-2-4	바다와 개울을 살리는 자연 친화형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 시설 52개소	3
4-2-5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 전국 제일의 쾌적한 농·수산업 환경 조성	공동집하장 설치 40개소, 수거장려금 9000톤	12, 2, 14, 15

□ **균등한 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의 메카 신안(13)**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s
4-1-1	노인회관을 이용한 공동급식 지원	경로당 공동급식 360개소	2
4-1-2	읍면별 1개소 이상의 소규모 요양원 건립 (거주지에서 인생 마지막까지)	소규모 요양원 건립 5개소	1, 3
4-1-3	노후화된 마을노인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및 확충	마을노인회관 신축 12개, 마을노인회관 개보수 200개	3
4-1-4	섬 지역에도 안정적인 탐진담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5개	3
4-1-5	의료취약지역 보건시설 확대	홍도보건지소 증축	3
4-2-1	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학생수 1,734명	4
4-2-2	중·고등학생 EBS 교재비 지원	중·고등학교 학생수 864명	4
4-2-3	1:1 화상 교육시스템 도입추진(고교)	수능방송 청취 학생 수 425명	4
4-2-4	국제화시대에 맞춘 해외연수 확대	초·중학생 어학연수 대상자 60명	4
4-2-5	원어민 보조교사 등 영어 학습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1,734명	4
4-2-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1개소	4, 1
4-2-7	초·중·고등학생의 공영버스 무료이용 제도화	공영버스 연평균 이용객 (초·중·고등학생) 30,000명	9, 11
4-2-8	모든 읍·면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1,734명	4

□ **맞춤형 교통복지로 편리한 신안(9)**

공약사업명		성과지표	연계 SDGs
5-1-1	(추포-비금)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 추진	공사 완료	9, 11
5-1-2	(자라-장산)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 추진	공사 완료	9, 11
5-1-3	(장산-신의) 연도교 조기 착공 추진	공사 완료	9, 11
5-2-1	전국 최초의 '버스 공영제'의 완벽한 정착	재정지원금 집행률 100%, 연평균 이용객 67만 명	1, 9, 11
5-2-2	여객선 야간운항의 완벽한 정착	보조금 집행률 100%	9, 11
5-2-3	작은섬 도선의 완전 공영화 (도선의 현대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사자 증원)	-	9, 11
5-2-4	흑산 소형공항의 조속한 착공	공사 완료	9, 11
5-2-5	압해대교-신장 4차선 도로 확장사업 준공	공사 완료	9, 11
5-2-6	암태도의 준 4차선 도로 확장사업 착공	공사 완료	9, 11

■ 민선 8기 공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성

- 신안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크게 5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5~14개의 사업이 구성됨
 - 각 사업별로 SDGs와 연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분야별로 목표와의 연계성이 나타남
 - 각 사업의 특성 때문에 고른 분포를 보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현재 주로 내세우는 가치와 방향을 볼 수 있음
- 쇠퇴위기에 빠진 신안군을 당장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우는 지역 인프라 조성에 따라 9번(산업, 혁신, 인프라)과 11번(지속가능한 도시) 목표가 가장 많은 연계성을 보이며,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14번(해양 생태계 보전)도 많은 연계성을 보임
- 반면, 5번(성평등), 6번(물과 위생), 10번(불평등 해소)는 거의 연계성이 없었고, 신안군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13번(기후위기대응)은 아열대 작물 재배와 관련해 한 차례 나타남
- 16번(평화, 정의와 법제도), 17번(파트너십)은 행정계획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주요 공약에서 시민참여와 협치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은 부분은 향후 신안군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 속에서 개선될 과제로 나타남

구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 조성 (5개 사업)				1							5						
친환경 고소득 전략사업 집중 육성 (14개 사업)	2	6	1				3	2	3		1		1	6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중심지 1004섬 신안 (10개 사업)		1	2								3	4		4	5		
균등한 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의 메카 신안 (13개 사업)	2	1	4	7					1		1						
맞춤형 교통복지로 편리한 신안 (9개 사업)	1								9		9						

[표 4-8] 민선 8기 공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성 분석 결과

* 목표별 숫자는 공약 사업에서 연계된 목표의 수

제5장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 1.新安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新安군 지속가능발전지표

1. 개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2021년 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22년 7월 기본법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목표, 수립, 숙의공론의 장 등 의무화
 - 비전과 기본전략의 수립(주기 20년), 추진계획(5년), 이행점검(2년), 지속가능성 평가(2년), 법령, 조례, 정책 수립 변경시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협의(수시) 등 지자체 법정 사무화
 -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 선진화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편성 예상, 신안군의 준비와 대응 필요

□ 비전, 전략 수립의 시사점

- 신안군은 광범위하게 위치한 섬과 갯벌의 지리적 여건과 지자체장의 리더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가능성과 연관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빈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내재화, 주류화 및 외부 홍보 등은 부족
 - 1990년대 후반 지속가능발전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지방의제21(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강조된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 생태 자원의 보존, 불평등의 해소, 주민참여와 자치, 문화와 예술의 활용 등이 민선 6기 이후부터 중점 추진 됨
 - 이런 현상은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된 슬로우시티, 에코뮤지움, 스마트도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문화도시 등의 정책이 신안군에서는 자연스럽게 추진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민선 6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생태적 보존 전략, 사회적 약자의 고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 등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전략화하고 1004섬 브랜드의 인문 사회학적 뒷받침 근거로 활용 필요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 신안군 지표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안으로 구성

▪ ‘햇빛, 바람,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신안군’

1004 섬의 자연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신안군의 자연적 자원을 최대한 지속가능발전 활용하는 비전을 구상, 햇빛과 바람(재생과 경제), 갯벌(보존과 경제), 공존(사회정의, 불평등해소, 포용사회)의 의미를 비전으로 반영

▪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SDGs의 섬 모델 지역으로 제시

(생태친화적 리더십, Eco Leadership) 민선 6기부터 강조되어 온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확산하고 전략적으로 확산

(사회 서비스 혁신, Social service innovation)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환경이 불편한 섬 지역의 특수성을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위기와 연계하여 혁신

(거버넌스 3.0, Governance, leading by Local)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기관 네트워크의 핵심축



〈그림 5-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

- 비전 실현을 위한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단계별, 주체별, 운영체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입체적으로 구성
 - (단계별 분류) 인식 전환 → 정책 고도화 → 정책 주류화,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전략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단 계	전략 요인	군정 반영	비고
인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리더십) • 기후위기, 기본법 시행 등 시대적 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성 입히기 	
정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의 정책 다양화 • 타 지자체 선도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 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 어필 가능한 정책 다수 • 국제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프로젝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섬지역 SDGs 정책의 글로벌 선도모델화 	

[표 5-1]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단계적 분류

- (절차적 분류) 지표 수립 → 이행과 실천 → 평가와 점검 → 환류, 지표 수립 및 재작성과정에서 전략 요인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강조 필요

단 계	전략 요인	군정 반영	비고
지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인식 • 부서 핵심 목표에 대한 지속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 시민 교육의 지속적, 광범위한 실시 후 • 부서에 맞는 지표 수립(지표 고도화) 	교육인력 양성필요
이행,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체계 확대 • 속의 공론의 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지속위와 지속협의 안정적 운영, 도서지역 적합 공론장 구축 	
평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평가, 공약평가 연계 • 시민 참여형 평가 • 보고 및 대외 홍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LR 보고서 작성 • 부서별 평가 시스템 구축 • 평가 매뉴얼 수립, 운용 	

[표 5-2]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세부 추진계획의 절차적 분류

(실행 과제 1) 지속가능성 인식 및 지속가능성 입히기 전략

- 현재 신안군정의 지향점을 지속가능성 확대, 지속가능발전의 대입을 통해 새로운 군정 방향과 대외 홍보 루트를 개척할 수 있음
 - 현재 신안군의 대표적 브랜드인 1004섬 정책은 문화 예술을 강조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섬의 특성을 강조하는 다양성도 내포하고 있음. 이 3요소는 1992년 브라질 리우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발전 정책들의 공통점임
 - 이외에도 신안군의 대표정책을 지속가능성으로 통합(브랜딩화)하는 과정은 정책의 인문·사회학적인 배경과 철학을 보강하고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현재 1004섬은 지명적 특징 외에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슈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1004섬, 햇빛과 바람과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1004섬’이라는 지속가능성 관점의 해석이 필요함
 - 대다수 지속가능발전 전문가들은 신안군의 정책 내용이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신안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알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 신안군의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적 지향과 철학을 갖도록 하는 전략은 지자체장의 정확한 군정철학과 공무원, 군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군정 적용 사례(기자회견 세트장)	결재 문서의 적용 사례																
	<p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padding: 2px;">신안군 SDGs 적용 개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신안군 SDGs</td> <td colspan="3">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td> </tr> <tr> <td>세부목표</td> <td colspan="3">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td> </tr> <tr> <td>관련 SDGs</td> <td colspan="3">  </td> </tr> <tr> <td>부서</td> <td>00000</td> <td>주요분야</td> <td></td> </tr> </table> <p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 padding: 2px;">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회 구현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군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려한 사회 정책의 구현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3. 3 ~ 연중 · 사업대상: 민군충과 취약계층 	신안군 SDGs	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			세부목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관련 SDGs				부서	00000	주요분야	
신안군 SDGs	10.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신안																
세부목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관련 SDGs																	
부서	00000	주요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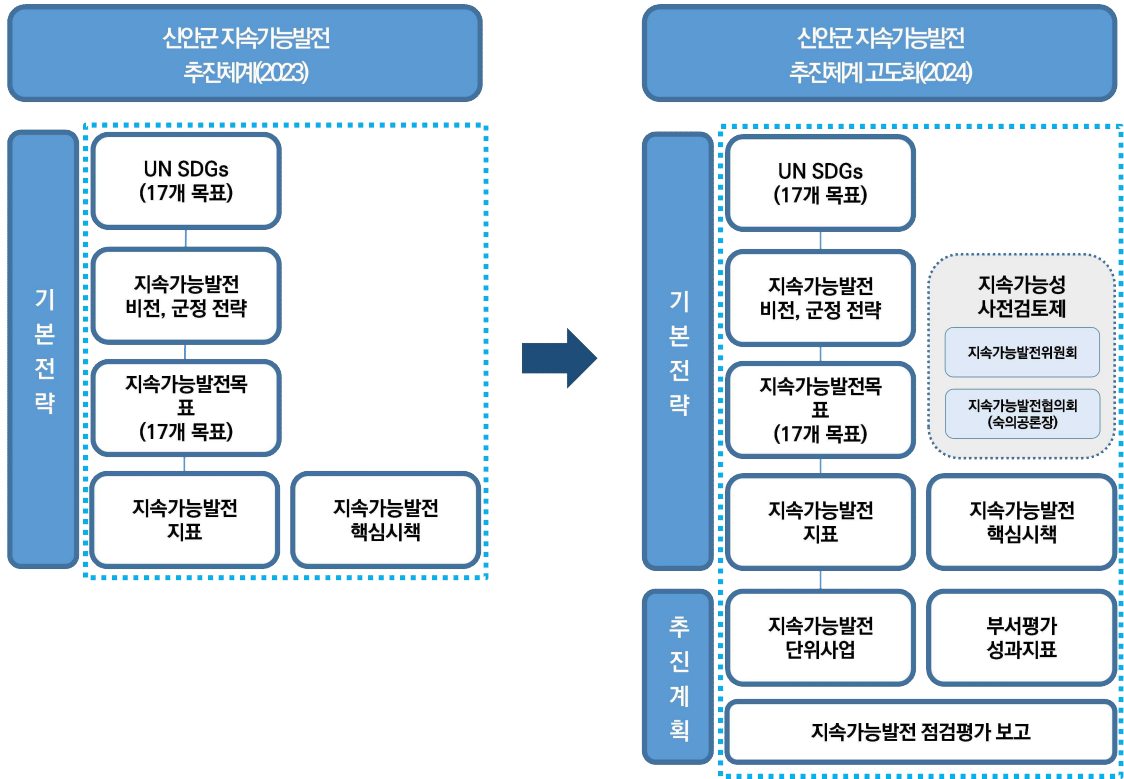
〈그림 5-2〉 신안군의 모든 시정 콘텐츠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



〈그림 5-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단계별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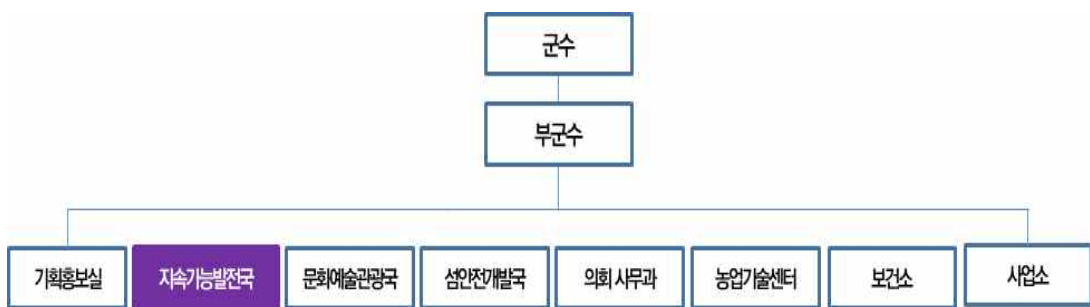
(실행과제2)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는 2023~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 구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공론의 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 노력 필요
 - 2023년 개괄적 정책 구성(동 용역) 이후 2024년에는 목표, 전략, 지표, 추진 체계, 핵심 시책 등을 정비하는 고도화 과정이 바람직함. 이는 군청 직원, 주민들의 부담과 반감을 최소화하고 지표 등의 반영 검토 등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임
 - 정책 추진체계는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체적인 기본계획(비전, 전략 포함)과 이행계획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할 수 있음. 기본계획은 변동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행계획은 실행가능성과 구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신안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고는 UN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음. 1회 보고서 작성 내용을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운용이 필요함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실행과제 1, 실행과제 2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존 고전적인 행정체계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종합적인 분석과 연계, 신안군 전국 선도 모델화를 위해서는 국 단위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함



〈그림 5-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고도화 계획(안)

- ‘지속가능발전국’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공약 관리,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생태계보전 사이트 등록 등의 주요 업무가 완료되어가고 있는 세계유산과의 기능과 재생에너지, 생태관광, 사회 서비스 혁신, 민관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5-5〉 신안군 조직체계 변화에 대한 제안(안)

정책 유형	SDGs 목표와 연계한 시책	기존 정책의 고도화 특징
①, ③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최대한 통합, 연계 운영
		• 지붕 없는 에코 박물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기업 연수 가능
①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전 국민 재공유<퍼플펀드> (고향기부제 결합)	•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교육복지, 청년에 일부 재공유
		• 신안군 탈석탄 정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고향기부 활용
②	신안군 2030 탄소세 도입	• 향후 늘어날 관광객과 시대적 과제 대응을 위해 기 폐지된 입도세를 주민 이익공유제와 결합하여 탄소세로 부활
		• 현재 호응이 부족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 지역 재생에너지확대, 환경보존과 연계된 기금으로 활용
③	2032 Rio+40 신안군 유치	• 신안군 수범 사례를 중심으로 1992년 이후 10년마다 계속 개최되고 있는 Rio+40 유치(아시아 지역 최초)
②	2030 신안형 주민복지기준선	• 신안군 통합적 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주민 복지기준선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제정·운영
②	신안군 생태공정 청년생태계 조성	• 섬 환경보존, 생태조사를 최대한 일자리로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
③	신안군 연례 인권 보고서 발간	• 국제 사회 기준, 인권 영향 평가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 통해 작성 배포

[표 5-3]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안)

(실행 과제 3) 정책 성과 제고가 가능한 초기 선도정책 발굴 및 추진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재해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음
 - ❶ 기존 핵심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연관 높은 요소 등을 부가하여 정책을 업그레이드
 - ❷ 군정 도입 초기에 운용 부담이 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제시(군민들의 이해 확산)
 - ❸ 신안군의 정책 여건과 중앙 정부,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외부 재정투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
- 다만, 초기 선도정책은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장기재정 투자보다는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조정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안군 핵심 전략과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시범 성격의 전략 제시)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24년 고도화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동 용역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지표를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토론을 통해 설정함
 - (시민 속의 공론장) 신안군 SDGs의 최종 확정은 광범위한 분야의 시민의견과 속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지표 설정이 가능함
 - (SDGs 정책 변화) 현재 기본법 시행 이후 금년 중 국가지속위(대통령 직속)의 구성과 함께 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구체화 시기 조정할 수 있음
 - (옥상옥의 문제 대두) 현 신안군의 부서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없을 경우,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자칫 민선 8기 공약, 2023 핵심업무 추진 체계와 중복되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고도화 단계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 유익함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그림 5-6〉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영에 관한 기본전략 구상(안)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UN SDGS 연계성	핵심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 분야
	신안군 주민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공영제 이용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중심 기능 활성화
	신안군 성평등, 인권 지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보고서 인권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연계
	신안군 물순환 체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다양성 지역 개발, 건축 교통, 도로 관리
	신안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퍼플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플펀드<매년> 5억<고향기부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기부제 연계 전 국민 탈석탄 펀드
	신안군 생태·문화·공정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머리물떼새를 관람하는 관광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스템 연계 강사, 투어, 관리 통합 관리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안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 안전 매뉴얼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 해수면 상승 등 재난 대응 및 안전 대책 기후, 수온변화로 인한 농수산 여건 변화 대응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생산량 탄소흡수량 정원조성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 보존
	전 국민 신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탄소세 도입 매년 27억 <90만 명×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생태보존 기금성격 (입도세의 시대적 변화 대입)
	신안군 SDGs 속의공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고도화단계에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과 기능 확대 속의공론 운영

[표 5-4]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핵심 전략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지표(안)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지표(안)

- 국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가능한 통계자료는 신안군을 기준으로 총 69개로 나타남
 -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의 활용성, 최근 10년 간의 추세 현황 확인, 국내 타 지자체와 상대적인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기초 현황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표를 기반으로 제안함
 - 향후 지표 평가를 위해 핵심전략과제(안)과 함께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지표(안)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표 설정이 요구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계자료
1 (빈곤종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인 등록 현황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현황
2 (기아해소)	경지면적(ha)
	가구당 경지면적(a)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 농가 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면적(ha)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3 (건강과 웰빙)	의료기관(병원 수)
	의료기관(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의료기관 종사 의료 인력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살률(십만 명당 자살자 수)
4 (양질의 교육)	학교 수
	학생 수(초·중·고등학생)
	적령 아동 취학(입학 상황)
	공공 도서관과 보유 자료 수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 수
	문화재
	체육시설
5 (성평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여성폭력 상담
6 (물과 위생)	상수도 보급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계자료
7 (친환경 에너지)	하수도 보급률(%)
	전력사용량(MWh)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8 (양질의 일자리)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천 명)
	취업자 수(천 명)
	청년고용률(%)
9 (산업혁신)	사업체 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명)
10 (불평등 해소)	월평균 가구 소득(%)
	다문화가구 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만족도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인당 도시지역 면적 (㎡)
	도로포장률(%)
	주택보급률(%)
	빈집비율(%)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도(μg/m³)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톤/일)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14 (해양생태계 보전)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15 (육상생태계 보전)	임야현황
	해안방재림 조성(ha)
	1인당 녹지지역 면적(㎡)
16 (인권, 정의, 법제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범죄 발생 및 검거
	화재 발생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피해 건수, 피해 현황)
	풍수해 발생(피해액)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지역안전지수
17 (파트너십)	공무원 총괄
	민원서류 처리건수
	정보공개율(%)
	종합청렴도
	주민참여예산액 (백만 원)

[표 5-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한 국가 통계자료 목록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

- 정 책 명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사업목표 :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사 업 량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외 6대 사업
- 사 업 비 : 445억 원
- 주요사업(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합 계
	2.5	7.1	33.2	402.4	445.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0.4	0.6	28	371	400
신안군 퍼플펀드 조성	0.4	0.4	0.4	2	3.2
2030 탄소세 도입	0.6	0.6	0.6	2	3.8
신안군 성평등·인권 보고서 발간	0.4	2	2	10	14.4
신안군 SDGs 고도화	0.3	1	0.2	1.8	3.3
신안군민 복지기준선 마련	-	0.5	-	-	0.5
Rio+40 신안군 유치	0.4	2	2	15.6	20

※ 향후 부서별 사업의 반영을 통해 고도화 작업 필요

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신안군은 대중교통 공영제,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갯벌과 생태계 보전 등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성공 사례와 경험 확보
- 글로벌 기후위기 확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내 제정 등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장, 사례 교육에 대한 수요 계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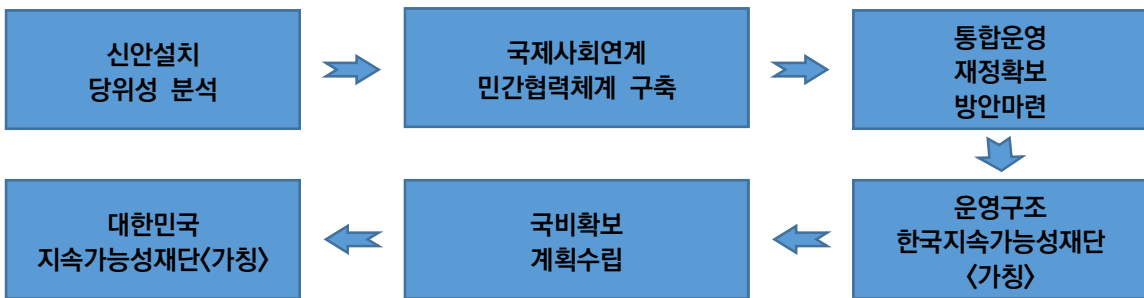
□ 사업목표

- 신안군내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약 100개 지역), 중앙부처,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청, 기업 관계자 등이 실무 교육, 정책 연수와 신안군 관광이 가능한 거점 마련(기존 시설 자원과 융복합, 에코뮤지엄 형태의 추진)
- 지속가능발전원 설립을 위한 전국 현황조사 및 국제사회 협력, 국제사업 연계 방안, 신안군 관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교육, 연수 사이트 및 소재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 발전원 추진, 준비, 운영을 위한 국제, 전국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축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소요예산 :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

□ 추진 로드맵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0.4	0.6	28	371	400
	타당성 용역	현황조사 국책사업화용역	기본계획	사업추진	

2

신안군 퍼플펀드 조성(재생에너지 주민이익 사회공유<재공유>)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新安군 재생에너지 주민이익 공유제도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우수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 필요(현 단계에서 고착시 주민 갈등, 포퓰리즘 등의 문제 대두)
- 현재 정책 단계를 베이스(1.0)으로 규정하고, 2.0, 3.0 단계로 지속적 확장 필요

□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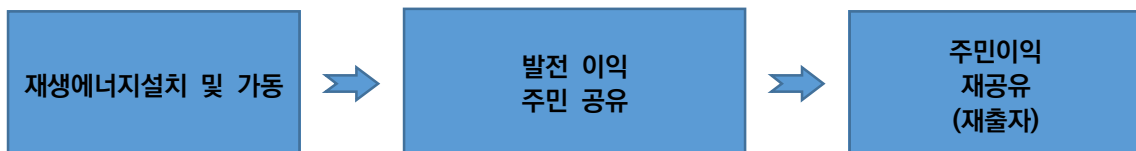
- 新安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주민 이익을新安군의 취약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펀드(가칭, 퍼플펀드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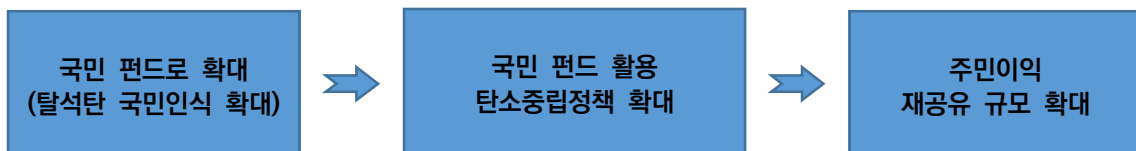
□ 소요예산 : 3.2억 원(지방비) * 최초 1억 원 정도의 펀드 조성 목표로 추진

□ 추진 로드맵

[퍼플펀드 2.0]



[퍼플펀드 3.0]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신안군 퍼플펀드 조성	0.4	0.4	0.4	2	3.2
	주민 속의 공론장 운영	홍보 관리	홍보 관리	홍보 관리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기후 위기 확대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확대, 탄소중립을 위해 개인적 지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 확대
- 신안군의 탄소중립, 환경 자원의 관리 위한 재정 비용 확대에 대한 보완책 필요

□ 사업목표

- 신안군의 주요 정책 투어 사이트 및 생태·경관 사이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 탄소세 납부하는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대가(고향기부제 연계)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소요예산 : 3.8억 원(지방비) * 최초 5억(100,000명 × 5,000원)에서 점진적 확대

□ 탄소세 활용 분야

- (환경 자원 관리) 식수 및 화장실 관리, 자원 순환 시설 및 활용 유도
- (탄소중립 확대)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재생에너지 유지 관리
- (관광 인프라 개선) IT, 어플 기반 안내 및 지역 자원 홍보 확대
- (정책 투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신안군 정책 우수사례 홍보 등
-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방문객 대상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홍보 체계 개선 등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2030 탄소세 도입	0.6	0.6	0.6	2	3.8
	실행 방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숙의 공론)	홍보 관리	홍보 관리	홍보 관리	

4

신안군 성평등·인권 보고서 발간(국제 사회 보고용)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민선 8기新安군수 공약 분석 결과 인권, 성평등 분야의 취약점 인지, 기존 인권 관련 외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정 전체적인 노력 필요
- 新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확대와 재정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국제사회, 국내 민간 그룹과 소통할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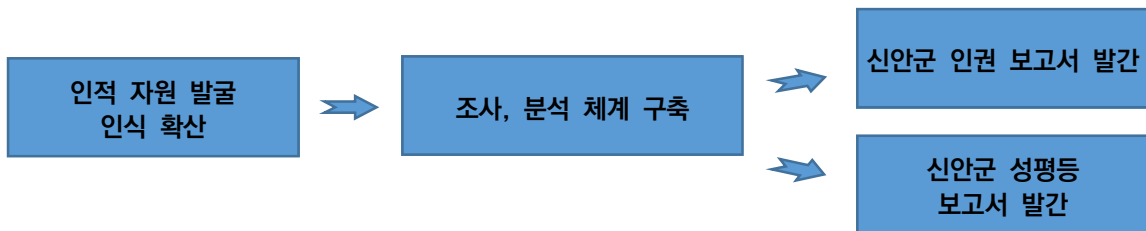
□ 사업목표

- 新安군 인권, 성평등 현황에 대한 군민 인식, 관련 SDGs 변화의 전반적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을 위한 내부 인적 자원 발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소요예산 : 14.4억 원(지방비)

□ 추진 로드맵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신안군 성평등 인권보고서 발간	0.4	2	2	10	14.4
	보고서 발간 체계 구축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5

신안군 SDGs 고도화 및 지속가능발전 연차 보고서 발간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23년 추진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방향설정과 핵심 의제 도출을 중심으로 추진 되었고 공무원과 주민 참여가 제한된 바, 군 전체적인 SDGs 도입을 위해서는 고도화 과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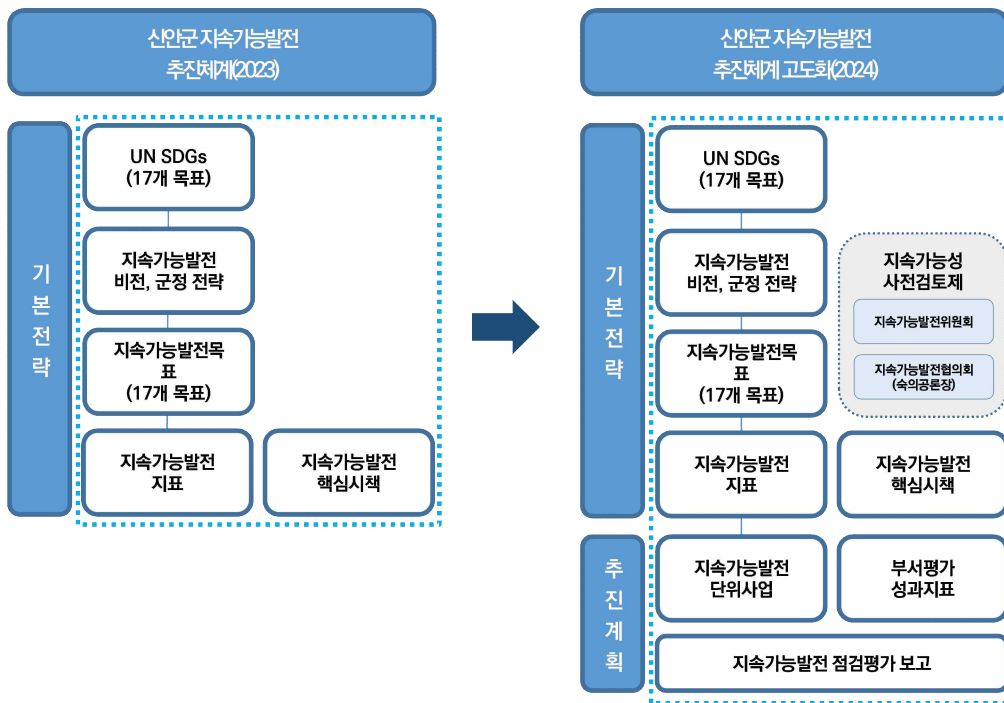
□ 사업목표

- 新安군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목표별 지표(SDIs) 설정
- 목표와 지표 설정을 위한 지역 속의 공론의 장 운영 및 지표 달성을 파악하고 SDGs 실천과정을 보고서로 발간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소요예산 : 3.3억 원(지방비)

□ 추진 로드맵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신안군 SDGs 고도화	0.3	1	0.2	1.8	3.3
	지표 수립 보고서 발간	고도화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추진계획 재수립	

6

신안군민 복지기준선 마련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이동 거리가 멀고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을 반영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新安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주민 복지 기준선 마련
 - 2022년 서울시 광진구청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8개 영역 152개 사업 제시
 - 2017년 수립된 서울시 복지기준선 5대 분야(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사업목표

- 新安군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관계 그룹(사회보장협의체)과 논의체계 구축
- 新安군민의 복지 기준선 마련의 필요성 및 방법, 속의 공론 및 조례 제정

□ 사업기간 : 2024년

□ 소요예산 : 0.5억 원(지방비)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신안군민 복지기준선 마련		0.5			0.5
	부서 협의 현황 공유	주민 속의공론 추진체계 마련			

□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국제사회는 1992년 지속가능발전을 인류공영의 원칙으로 합의 후, 10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전 세계 193개국 정상(최소 장관급), UN 산하기관, 국제 NGO 등 2만여 명 참여
- 2032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회의는 국제사회의 여건과 흐름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 신안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수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탄소중립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유치 가능성이 높으며, 섬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 여건도 우수

□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신안군 유치 여건 검토, 당위성 발굴, 유치 이론 수립
- 신안군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 정부 협력 과제 발굴, 유치 로드맵 구상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소요예산 : 20억 원(도비 20, 군비 20)

□ 재정계획(안)

제안 시책 정책	재정계획(단위:억 원)				
	23	24	25	26이후	총계
Rio+40 신안군 유치 추진	0.4	2	2	15.6	20
	국제 여건 현황 조사	국제 사회 정부 협력	관련 국제채널 초대 국제행사	유치전 돌입 국제사회 홍보	

제6장

신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언

1.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제9조

□ 추진배경

-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지역은 20년 단위의 지방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70개 지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관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체계로 변경이 필요함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기본전략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 직전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6-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은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반에 걸쳐 개략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음
- 기본전략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체 현황, 정책의 기본방향,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별 시책(개요) 등을 담고 있음

-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 전략, 분야별 실행계획, 자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본전략이 전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추진계획은 개별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를 담을 수 있음

구분	기본전략	추진계획
특징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반에 걸쳐 비전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정계획의 수행방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전략 •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성과지표

[표 6-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차이점

2.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의 작성과 내용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함
- 이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지방은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를 작성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는 기본법 제2조(정의)와 제8조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 전략으로 수립하는 지방 목표를 말함

□ 주요내용

- 지방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저출생,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체 공동의 목표 설정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세부목표 구성
 - 유엔의 목표 체계와 유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가능성 여부를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17개 목표 체계로 구성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17개 목표 외에 세부목표를 설정할 때는 유엔의 목표 체계와 유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에 적용가능한 사항만 활용해 70~90개 세부목표로 구성함
- 17개 목표는 폐쇄형 문장의 단문 형태로 구성하며, 세부목표는 구체적인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문장 형태로 구성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예를 들어, 유엔 SDGs 1번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며, 1.3의 세부목표는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함

-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로 수립할 수 있음
-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융합적으로 접근하는 유엔의 목표 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
- 종합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계획 등 주요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정책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목표와 세부목표를 구성하며, 세부목표는 각 목표를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1번 목표는 일반적으로 빈곤에 관한 내용이나, 1.5 세부목표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목표 수립 필요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이지만 동시에 지역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립과정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수요소임
 - K-SDGs 수립, 수원시·당진시·원주시의 L-SDGs 수립과정은 목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음

3.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구성과 내용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해당 지역의 사회, 환경, 경제,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 현황·조건·변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 정책 수립을 지원, 평가하는 수단이자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공유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수단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부서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예를 들어, 교통사고율은 경찰청 통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해당 통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뺄 수 없고,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지표 통계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또한 각 부서별 사업이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부서 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 경우, 가장 큰 관계가 있는 부서의 담당자가 지표를 담당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표 수가 많지 않으므로 기획실의 평가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원활한 지표 자료 수집 및 통계 데이터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기본전략에 포함되며, 성과지표는 추진계획에 포함됨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수단으로, 해당 지표의 달성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공무원의 업무평가와 연결될 수 없음
 - 예를 들어, 사회 지표에서 지역의 자살률이 높고, 중요한 사회 문제라면, 이를 담당할 부서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반면, 추진계획에 포함된 성과지표는 각 추진계획이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의 사업계획이고, 이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를 보는 평가 수단으로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추진계획의 성과지표는 투입 예산 대비 시행 결과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임. 따라서 기본전략의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추진계획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새로운 지표 설정 대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BSC 지표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4.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 추진배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위원회의 역할과 내용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법정 위원회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구성

- 일반적인 법정 위원회 위원 위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위원 위촉 공고, 선정 등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동을 진행해 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자문 및 협의를 통한다면, 지역 내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음

○ 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신속하게 해야 할 사항

- 기존 계획에 대한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변경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 지방기본전략 수립 과정에 포함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의 시행 방안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 질문 6번 참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차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기구이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례상 법정 기구임
- 위원회와 협의회는 명칭만 유사할 뿐 기능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며, 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

-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 영역에 걸쳐 정책과 실천 운동을 하고 있음

구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위원회(폐쇄적 거버넌스형) : 각계대표 및 전문가 소수 위촉 • 행정부서에서 위원회 간사기능 수행 • 권한과 위상이 높으며, 공식성과 안정성을 갖고, 정책연계성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기구(개방적 거버넌스형) :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 참여가능 • 사무국의 별도 운영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짐 • 조직의 연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상향식 실행력이 강함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평가보고서 등의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정책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작성·이행·평가참여, 민관협력 실천사업 수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4회 정기회의 중심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상시활동 및 실천사업 중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주도 : 결정사항의 제도적·정책적 구속력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치(독립성, 자율성) : 민관협력 허브기능 중심으로 운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민관공동),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단(상임·공동회장),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실천위원회, 사무국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핵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의 역량과 참여 수준 • 행정기관의 열린 자세와 소통 노력
보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사업예산 및 사무국 운영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예산이 행사성(일회성) 사업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6-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이점

5.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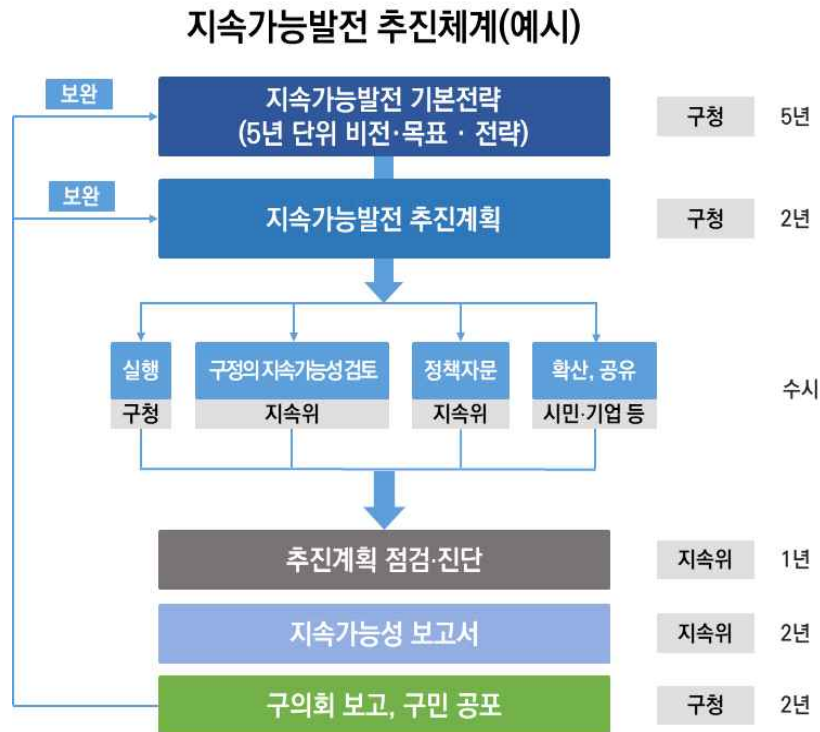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도구임
 -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이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민의 삶의 질을 진단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임
 - 주민이 참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영역을 찾아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 지표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
- 지표를 통해 지향해야 할 정책 및 계획의 효과와 방향 제시할 수 있음
 - 지표는 정책 수립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
 - 기존의 양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기반에서 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며, 기존의 양적인 투입·실적지표 대신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해 평가
- 주기적인 평가(2년 단위) 및 진단을 보고서로 발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고, 지속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을 도모함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함



〈그림 6-1〉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환류체계

*자료 : 강복구(2022),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역보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를 내고 있음
 - 국내에서는 수원시, 당진시, 서대문구가 자발적 지역보고서를 내고 국제사회에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성과를 공유했음
- 과거 지역 평가에 대한 방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됨

- 행정의 사업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개별 부서나 개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그쳤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역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환류하여, 모든 행정과 사업을 평가하는 기본 바탕으로 설정함
-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지표의 추가·수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평가에 따른 지표 및 목표 변경의 유연성 확보해야 함
- 지속가능성 평가의 주체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임. 평가의 중심 주체로써 주 역할을 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접 진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이 경우 단순 연구에 그칠 경우, 보고서만 제출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의 주체들이 보고서 작성 및 자문의 과정에 참여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포럼, 토론회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설정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성과지표에 정확한 목표치가 명시되어야 함
- 대부분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목표 설정을 추후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대부분 목표치가 없이 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변화의 추세만 확인하거나, 유사한 지역과의 상대비교만 시행하게 되는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이 꼭 이뤄져야 함

6.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의 제도화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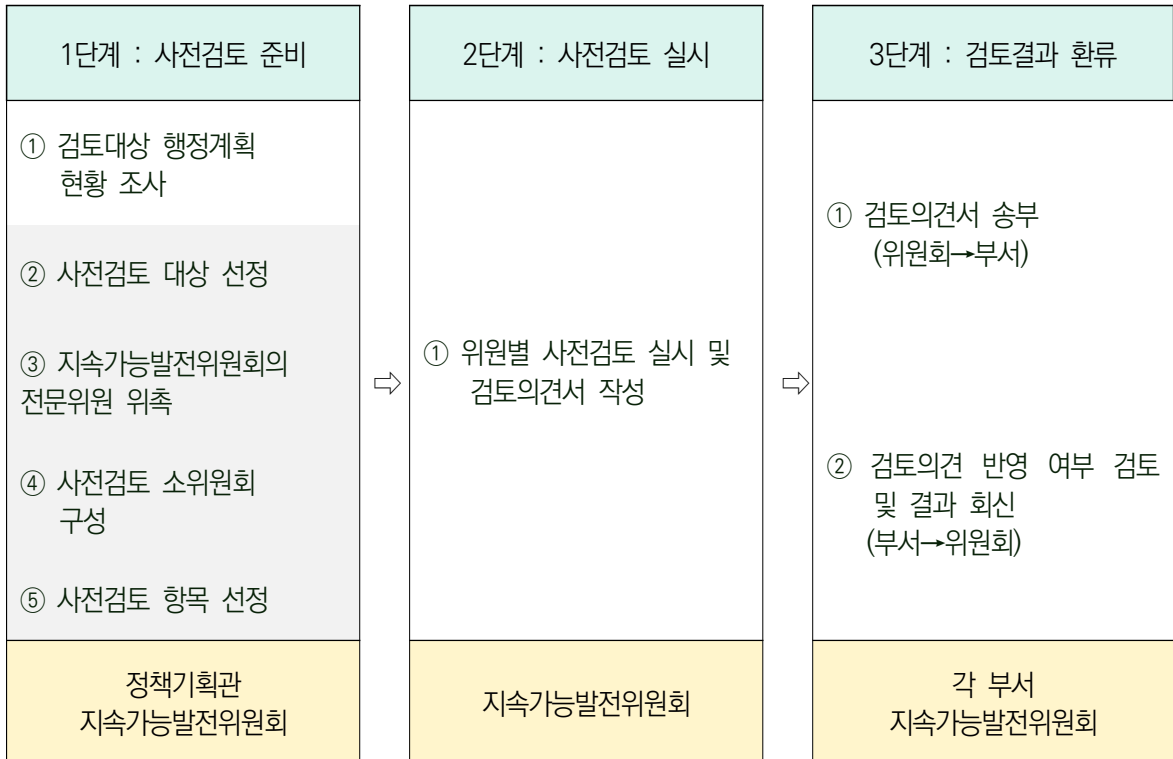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환경, 사회, 경제 등에서 지속가능성 기준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전에 점검하여 정책의 부작용과 갈등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법제도 및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법 제1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법 제14조 제4항)
 -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임
- 행정계획의 사전검토 절차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됨
 - 1단계 : 사전검토 준비단계. 검토대상 행정계획 현황조사, 사전검토 대상 선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 위촉(대상 행정계획), 사전검토 소위원회 구성, 사전검토 항목 선정
 - 2단계 : 사전검토 실시단계. 위원별 사전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서 작성

- 3단계 : 검토 결과 환류단계. 검토의견서 송부, 검토 의견 반영 여부 및 결과 회신 등



〈그림 6-2〉 지속가능발전 사전검토제 적용 절차

*출처: 광주광역시(202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체계 보고서.

7. 이해관계자 그룹을 통한 숙의공론장

□ 법적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

□ 추진배경

-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공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확고히 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한 영역만의 것이 아닌 환경, 경제,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영역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숙의공론화 장이 요구됨
 -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 NGO,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와 노동조합, 비즈니스 및 산업, 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농부 외에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 그룹 및 재단, 이민자 및 가족,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가 필요함
-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1항)
-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9조 제2항)
-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29조 3항)

○ 숙의공론장 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장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장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숙의공론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자 그룹을 다르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도시 지역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그룹이 더욱 세분화되어 구성될 수 있음. 반면, 농어촌 지역은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자치 조직,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농업 또는 어업 단체 등을 중심으로 숙의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숙의공론장은 단지 2~3시간의 공론 과정으로 끝나지 않음. 각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을 그룹별로 조직하고, 논의를 위한 자료를 배포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하도록 유도함

- 검토 자료는 주로 기본전략(안),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배포함
- 추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성과지표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참여그룹의 정책적 이해와 세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이해관계자 그룹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각 그룹별로 정책 제안문(입장문서)을 작성함

○ 정책제안문 작성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또는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여해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 회람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

○ 그룹별 입장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룹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참가자 또는 참여단체의 일부 입장만 반영되는 현상을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함. 이 문서는 내부 회람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그룹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해당 그룹의 의견을 존중하게 됨

연구기관 _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책임 박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공동연구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5층

이메일 kicsd.re.kr@gmail.com 홈페이지 www.kicsd.re.kr